

68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와 전망

2021. 1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21-1 (No.6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필자 소속기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

2021년 1월 14일 (목), 9:30 - 16: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평화관 1층) / 웨비나

Session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사 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정 치	발표	북한의 통치사상, 권력구조 정영철 (서강대 교수)	7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의 지도권과 북한 체제의 안정도 사카이 다카시 (前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	43
	토론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59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5
대 외	발표	북한의 대미정책 기조와 전략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75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85
	토론	박원곤 (한동대 교수)	97
		안경모 (국방대 교수)	103
대 남	발표	북한의 대남정책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113
		북한의 통일전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123
	토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31
		이정철 (송실대 교수)	137

Session 2 제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평가 및 전망

사 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경 제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 평가 143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특징과 전망 159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과제 177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hr/>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189 한홍열 (한양대 교수) 197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3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 213		
	토론	

Session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정치

북한의 통치사상, 권력구조

정영철 (서강대 교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의 지도권과 북한 체제의 안정도

사카이 다카시 (前 일본公安조사청 조사2부장)

토론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통치사상, 권력구조

정영철 (서강대 교수)

1. 배경

■ 대내적인 측면

○ 제8차 당 대회 결정: 2020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 결정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당과 정부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
-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
- 당 제8차 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
- 당 제8차 대회 소집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강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80일 전투 결정 - 제8차 당 대회 준비

○ 2016년 제7차 당 대회 이후, 약 4년 8개월 여만에 8차 당대회 개최

- 개최 의도: 7차 당 대회 이후의 총화 평가 및 새로운 전략, 계획의 수립

1. 당 대회의 정기적인 개최 - 당, 국가, 군의 정상적인 운영과 계획 수립 및 집행
2. 국가 경제의 전략, 계획 수립과 집행
3. 당 지도기관의 보강
4. 당 규약 등의 개정과 통일 문제

○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 제8차 당 대회는 북한 사회발전 행로의 이정표

* 북한의 주체적 역량의 강화, 전략적 지위의 강화

* 대외 관계의 강화 -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제재 및 봉쇄의 돌파 계획 목표의 미진, 그러나 경제의 성장 국면은 뚜렷

* 지속적인 북한의 주도적 역할 강화

○ 2020년 11월 정치국 확대회의: 경제지도 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

- 북한 경제는 코로나 19 팬데믹 + 자연재해 + 국제적인 제재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심각한 경제적 혼란(물가 인상 + 환율 상승 등)이 보고되지는 않음.

-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물가, 환율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 사업 역시 지속되고 있음.

- 그럼에도 ‘예정했던 경제 성장목표의 미달’: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으로 판단
-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제8차 당 대회 주된 의제는 경제문제 즉,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예상했고, 실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 대외적인 측면

-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
 - 북미관계의 교착 상태 지속
 - 예견했던 북미간 관계의 정상화 흐름의 교착: 안보의 문제 + 경제의 문제
 - 아울러,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
- 2019년 말 전원회의 - 정면돌파전 선언
 - 정면돌파전: 안보와 경제
 - 핵 및 미사일 능력의 강화 +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 경제분야에서 자강력 제일주의의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
 - 선제적인 국경 봉쇄
 - 대외무역의 축소
 - 내부적인 방역 사업
 - 전체적인 대외 활동의 축소
- 코로나-19 영향이 원인이겠지만, 북한의 대외, 대남 관계에서의 원칙적 입장

-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 금강산 시설: 그러나 당 창건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연설
- 대미 관계에서의 침묵?
- 백두산 지구 + 원산 지구 + 양덕 지구, 관광 3대 지구 건설 지속 및 완공·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여짐.
- 이렇게 본다면,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대남 분야에서의 변화도 예상됨. 즉,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대남 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대미관계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의 재천명, 그리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

■ 제8차 당대회 의의

- 일련의 당 정상화(?) 즉, 당의 정기적인 회의 및 정책 결정 + 국가 및 군의 정책 집행의 정상적인 과정이 안착되는 과정
-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 제8차 당 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당을 중심으로 한 ‘통치의 일상화’가 안착되고, 북한의 당 중심의 체제가 정립되는 것으로 평가 - 특히, 김정은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이 공식화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법, 기관 및 사상적 좌표 등이 설정되고 공식화되는 대회
- 이번의 제8차 당 대회는 김정은식 정치방식과 노선이 구체화된 대회였다고 할 수 있음. 그 동안 제기했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공식화하고, 이를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사상적 좌표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노선, 당 규약의 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개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변화를 결국 ‘시대적’상황에 대한 반영과 현실의 인정에 기초한 것
-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김정은 발언:

1. 우리 당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제일 확실하고 튼튼한 국가 방위력으로 규정했으며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에 모든것을 다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 목표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으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3. 나는 모든 당 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래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정리하면,

- 군사력의 준비 + 강화: 확고한 평화적 환경의 마련
- 앞으로의 목표: 인민생활 향상 - 당과 국가의 최고 목표
- 당 및 간부 일꾼들의 혁신과 노력 요구 - 해결의 방책
- 제8차 당 대회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
-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상적 방향으로서 ‘인민’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무장

- 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의 전략/계획의 수립
 - 이를 실현할 간부 + 일꾼 등의 노력과 조직 개편
 - 조직개편은 전문성 및 능력을 중심으로 한 개편 + 세대 교체의 지속 + 조직의 방대함을 줄이는 방향/ 이 점에서 조직지도부가 주목됨.
 - 이런 점에서 사상적 좌표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정책의 중심에 올려놓았으며, 이는 곧 앞선 ‘선군시대’의 선군정치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정치의 정상화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결과적으로, 이번의 제8차 당 대회는 ‘인민’을 키워드로 ‘인민생활 향상’을 중심에 둔 대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상-조직적 개편 및 현실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제 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당의 혁신적 변화 - 당 강령 및 규약의 변화 등을 추구한 대회라고 할 수 있음.

2. 제8차 당 대회의 핵심 키워드

■ 발전, 사상과 조직

- 당 운영의 정상화 + 당 대회의 정상화/5년 주기 개최 및 점검과 총화의 정상화
- 김정일의 개회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 되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 김정은 개회사의 언급은 앞서의 일련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해석해보면,

- 금번 당 대회의 핵심 의제는 인민생활 향상 - 그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당의 경제전략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하였음.
- 이의 원인은 객관적인 환경의 탓도 있지만, 핵심은 주체에 있음 - 이 주체적 원인은 결국 앞서 말했던 11월의 정치국 회의에서의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 또한, 10월의 열병식에서 했던 연설 “나는 모든 당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래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 즉, 제기된 문제의 원인은 사상과 조직 - 사람, 구체적으로는 간부/일꾼들
- 이의 혁신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사상적 재무장과 혁신, 조직적 개편과 혁신으로 모아짐.
- 김정은의 개회사에서 비상설검열위원회를 통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와 의견의 수렴 등을 진행하였고 함 - 전반적인 혁신의 방향 설정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이는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당 및 조직 전반에 걸친 혁신을 준비하는 것
- 결국 이번 당 대회는 경제가 중심이지만, 그 핵심은 사상과 조직의 혁신이며 - 제7차 당 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대회였다면, 이번의 제8차 당 대회는 김정은 식의 통치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일상화되는 대회라고 할 수 있음.
- 주목되는 것의 하나는 제7차 당 대회와 비교한 8차 당 대회 대표자의 비율인데, 국가 부문, 과학교육 부문, 그리고 현장 출신의 당대표자들

의 구성이 늘어나고 군과 당정치 부문의 비중이 대폭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김정은 이후, 북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역할의 강화, 과학교육 분야의 강화’ 그리고 ‘인민’의 강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장 핵심 당원들의 비중이 확대되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핵심 원인을 주체에게서 찾음으로써, 대외적인 조건 즉, 대남/대미 그리고 제재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인 제안이나 2018년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의미. 즉, 주체적인 동력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객관적 조건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2019년 말, 전원회에서 천명한 ‘정면돌파’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

〈제7-8차 당 대회 당대표자 구성의 변화〉

	7차		8차		변화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당, 정치일군	3,667	100.0%	5,000	100.0%	
당, 정치일군	1,545	42.1%	1,959	39.2%	-3.0%
국가행정경제일군	423	11.5%	801	16.0%	4.5%
군인	719	19.6%	408	8.2%	-11.4%
근로단체일군	52	1.4%	44	0.9%	-0.5%
과학, 교육, 보건, 문화 예술, 출판보도	112	3.1%	333	6.7%	3.6%
현장 핵심당원	786	21.4%	1,455	29.1%	7.7%
항일혁명투사	6	0.2%		0.0%	-0.2%
비전향장기수	24	0.7%		0.0%	-0.7%
여성	315	8.6%	501	10.0%	1.4%

〈대회 집행부〉

김정은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 박봉주동지, 박정천동지, 김재룡동지, 리일환동지, 최 휘동지, 박태덕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김수길동지, 태형철동지, 오수용동지, 김형준동지, 허철만동지, 박명순동지, 조용원동지, 김여정동지, 김정관동지, 정경택동지, 김일철동지, 임철웅동지, 리룡남동지, 김영환동지, 박정남동지, 양승호동지, 리주오동지, 동정호동지, 고인호동지, 김형식동지, 최상건동지, 오일정동지, 김용수동지, 리상원동지, 리영길동지, 김명길동지, 강운석동지

- 대회 집행부 구성원은 총 39명/ 이 중 75%에 달하는 29명 교체

3. 총화와 과제

■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

- 투명성: 북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방식
- 세속성: 세속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묘사
- 이번의 개회사 및 총화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며, 세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주목할 지점: 비상설검열위원회 조직과 광범위한 여론 수렴
 - (To the Mass), From the Mass, To the Mass - 북한 대중운동의 전형성
 - 이번의 경우, 그간 굳어져 온 관행 - 형식주의, 관료주의 - 등에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여론 수렴과 결합-원인의 진단, 처방 마련
 - ‘인민’에 대한 지도에 우선하여, 오랫동안 굳어져 온 관료적 타성을 먼저 아래로부터 핵심 원인-처방 등을 밝히기 위한 작업
 - 핵심 당원-인민의 참여를 강화, 증대시키고, 형식주의-관료주의에 대한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방식
 - 이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권위 회복 및 강화, 관료 혁신, 세대 교체 등의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김정은이 주장하고 있는 ‘인민’을 중심에 놓는 국정철학(?)과도 부합
 - 위기를 ‘인민’의 참여를 통해 돌파하는 효과

○ 광범위한 여론의 수렴, 원인의 진단과 처방의 마련은 현재의 경제제재에 대한 외부적 환경 - 객관적 조건에 원인을 돌리는 사회적 타성을 극복하고, 내부적인 동력을 마련하는 주체적 조건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정면돌파’전에 부합(이의 성공여부는 미지수), 또한, 핵심 당원-인민의 지지를 통해 김정은의 통치와 발전의 전략을 정당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의미

- 과거 천리마 운동 시기, 김일성 ‘강성제강소’방문과 유사 - 김일성의 발언: 내가 믿을 건 노동계급뿐!(이를 김정은식 버전 - 내가 믿을 건 ‘인민’뿐) ; 지난 열병식 때의 ‘인민’에 대한 감사와 신년 연하장의 ‘인민’을 위한 투쟁과 충정, 그리고 일꾼들에 대한 요구성의 강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은 번즈가 말한 ‘변혁적 리더십’의 유형을 볼 수 있음. 근본적인 원인의 발견과 그에 대한 처방,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

-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실용주의적’, ‘성과주의적’ 유형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김정은 ‘식’의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

■ 총화에 앞서

○ 제8차 당 대회 총화의 특징

- 지난 제7차 당 대회는 2일에 걸쳐 이루어진 데 반해, 이번의 총화 보고는 3일에 걸쳐 진행됨.

- 이는 2016년이 36년만의 당 대회와 함께, 기존의 시간 동안의 평가에 긴 시간을 할애했던 데 비해, 이번의 총화보고는 지난 5년의 총화와 함께 이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

- 오히려, 이번의 총화가 길었던 것은 그 만큼 전면적인 평가, 비판, 진

단과 처방이 심도 깊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번의 8차 당 대회를 ‘김정은의 북한 만들기’의 총적 좌표와 청사진을 밝히는 것이었음을 의미

- 모든 분야에 대한 세세한 비판과 평가, 총화 그리고 해결책 및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 약 10여 년간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 사회는 많은 변화를 보여왔으며, 이를 위해 ‘혁신’을 키워드로 의욕적인 변화를 추구해왔음.

- 대표적으로 ‘모란봉악단’의 등장은 단순한 문화적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직성을 풀고 혁신의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문화정치적 기획’이었으며, 김정은이 직접 이를 밝히고 모란봉 악단과 같은 혁신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 김정은의 혁신의 키워드는 ‘사상’과 ‘조직’을 축으로 하여 김정일 애국주의, 우리 국가체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수렴되는 사상적 좌표의 설정과 군의 비정상적인 비대함을 제거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당과 국가가 전면에 등장하여 정치와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당-국가체제’의 복원이었고, 이를 위해 조직적 개편을 진행하였음.

- 그리고 이의 총적 목표로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제시하였음.

○ 전 사회적인 혁신의 미흡과 과거로부터의 관성,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깊은 병폐

- 당 제7차 대회 이후, 사상과 조직적 혁신의 추구는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문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평
- 외부적인 조건의 불리함(북미관계/남북관계 및 국제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즉 내부의 주체적 요인이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림.

- 문제는 이러한 근원을 어떻게 들어낼 것인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비상설검열위원회’를 조직하여 광범위한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혁신의 근거, 그리고 해결책의 근거로서 제시함. 즉, 지금까지의 하향식 혁신과 조직 개편을 벗어나 상향식 혁신과 조직개편을 시도하고자 함.
- 또한, 시대적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에 맞게 남북관계(규약 변경 등) 및 대외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함.
 -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성’의 강화 및 정착이라는 조건에 맞게, 국가 vs 국가 이자 동시에 민족 내부 문제로서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통일 정책,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조평통이 내각 - 국무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조직(과거 당의 오파단체) 되었던 것은, 사실상 통일의 문제를 당 차원과 더불어 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담당하겠다는 것을 의미
 - 이번의 8차 당 대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남북관계에 대한 규정, 규약의 개정, 담당 부서의 개편(?) 등의 방향이 제시되고, 앞으로 이를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법적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음.
 - 대외관계 역시 2018년부터 미국과의 ‘대담판’을 통한 그랜드 플랜이 시도되었지만, 무위로 돌아간 조건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외교적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외 행보가 예상됨.

1) 지난 기간의 성과

- 총적 평가: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 것’ -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에서 더 나아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라는 용어의 등장 -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서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사회주의, 사회주의 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뚜렷한 성과
- 주목할 것은 ‘인민군대를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돌발적인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철벽으로 보위하는 국가방위의 주체,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게 한 것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는 지난 시기, 선군정치 시기 군의 경제 돌파구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군은 체제 보위의 물리력을 우선했던 것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통해 재해석하고 있는 부분. 선군정치의 완전한 정리 및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통한 수용과 흡수
- 김정일의 독자적인(?) 사상적 좌표를 드러내고 있는 지점으로 생각됨. 즉, 앞서의 선군사상(선군정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흡수함으로써, 계승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사상 분야에서의 총화는 결국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정당성과 앞으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서 당과 국가, 사회주의 건설의 사상적 좌표로 확고히 하겠음을 의미. 실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주객관적요인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총결기간 재확증된 귀중한 철리’- 김정일 시대의 실천 이데올로기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 이는 앞으로의 당 사업의 강화 발전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정치이념으로 하여, 친인민적-친현실적 사업의 추진, 그리고 당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 총화의 흐름과 내용

- 전체적인 총화의 흐름은, 총괄적인 것에 이어 경제 전반 → 경제 관리 → 건설사업 → 농업 → 금속·화학 → 경공업 → 산림 → 과학기술·교육 → 보건 → 체육 → 국방 → 대외 등으로 순으로 이어져 있음

- 경제건설에서의 전략목표의 미달성 - 소중한 밑천의 마련? 즉, 전체적으로 각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목표의 미달성으로 평가하면서도, 잠재력의 확보, 돌파구의 마련, 역량과 수단의 마련, 토대의 확립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 결국 경제 분야에서는 전략/계획적 목표의 미달성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과 과제 등이 총화를 통해서 심각하게 논의되었을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내각 및 각 단위에서의 토론이 한층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주목되는 것은 국방 분야에 대한 총화와 성과가 길게 언급되고 있는데, 현재 총화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전문을 요약한 기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국방’에 대한 강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중요한 것은 국방의 지난 시간 성과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국방력 강화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며, 첨단 로켓, 전술 핵무기, 다탄두개별유도기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핵잠수함 등 등... 이는 2019년 말의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실제행동’, ‘새로운 전략무기’의 보유, ‘전략무기개발의 중단없는 계속’ 등을 통해 ‘하노이 교착’ 이후,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공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됨.

- 또, 하는 반복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대국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대외적인 평화환경 마련을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었고, 앞으로도 이를 추구하겠다는 천명한 것으로 판단됨.

- 총화 전문을 보아야 알겠지만, 총화 성과 부문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2)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

■ 경제분야

-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심중하게 총화되고 각 부문에 산적되어있는 부진상태와 그 원인에 대하여 지적” - 객관적 조건으로서 제재봉쇄 + 자연재해 및 코로나 팬데믹 -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적 투자들과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원인

- 주관적 요인: 5개년전략의 비과학적인 타산, 과학기술과 경제적 연계의 미흡(실제, 과학적인 성과 역시 목표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임), 경제사업체계와 질서의 미흡 - 결국, 주관적 타산,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무능력

- 이런 문제들이 문제의 원인을 주체에서 찾고, 결국은 사상적 무장과 조직적 혁신의 강력한 근로이자 명분 - 동시에 해결책의 과제

- 혁신과 창조 및 낡은 것과의 결별을 의미

○ 해결의 전략

-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연계 복구 정비 - 자립경제의 핵심(경제의 선순환적 고리의 형성 및 체계와 사업질서)

- 새로운 5개년계획의 총적 방향: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 - 인민생활 향상의 토대 구축

- 중심과업 - 금속과 화학: 이는 곧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강화, 경공업의 원료, 자재의 보장 및 소비품 생산의 확대

- 금속과 화학공업 - 농업과 경공업의 연계성 강화, 이는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되어왔던 ‘수입병’과 ‘재자원화’의 과정과 밀접히 연결

○ 새로운 5개년계획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강화 - 경제관리의 개선, 과학기술과 생산의 연계성 강화, 대외활동의 강화
- 계획의 현실성: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

○ 경제 각 분야별 계획

- 금속: 주철의 기술적 완성도 향상/ 철강재생산의 확대
- 화학: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사의 명줄” - 기술력량의 강화/ 인민생활과 관련된 화학제품생산의 확대
- 전력: 조수력발전에 국가적 힘을 집중/ 핵동력공업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
- 석탄 / 기계/ 채취공업/ 림업/ 교통운수 - 철도현대화/ 룽해운
- 건설: 살림집건설 - 평양시 5만 세대 (해마다 1만 세대), 검덕지구 - 2만 5천 세대
- 건재: 800만 t 세멘트 고지 - 현재 총화문(요약본)에서 유일하게 수치가 등장
 - 이로 미루어보면,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수치가 제시되었을 가능성
- 체신: 다음세대 통신으로의 이행
- 상업: 국영상업의 발전, 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살리는 것/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는 것 - 앞으로도 국가 주도의 상업시설의 확대(대형 유통상점 등)가 예상되며, 이는 김정은 등장 초기부터 있었던 대형 슈퍼마켓 등의 건설의 연장선에서 이해됨, 그러나 시장에 대한 강제적인 축소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앞으로 국영 상점과 시장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국토관리: 특히, 재난 대비, 각 지역의 인프라 건설 등
- 대외경제분야: 과학적인 전략/관광 -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
 - 금강산 지구 -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고성한 부두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전형적인 우리 식 건축형식의 건물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 그리고 ‘고성향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우너지구, 체육문화지구’등을 꾸리기 위한 사업
 - 이러한 언급은 2019년에 이미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 철거’의 연장선에 있으며, 남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회에서 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지점/ 앞으로 남북간에 논점이 될 것이지만, 북한이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상,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관광을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상정한 상황에서, 백두산 지구/ 양덕지구/ 원산-금강산지구에 대한 관광 개발을 남한에 상관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관리,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의 강조
 - 일원화통계체계(과거,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는 다름) 및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의 개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공간의 이용
- 구체적인 과업
 - 농업 - 식량의 자급자족
 - 경공업 -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선질후량
 - 시·군의 자립성 강화 - 주목되는 것은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
- 앞으로 시·군 단위의 경제개발 및 지역 인프라 건설/ 시·군 단위의 대외적 연계등의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국방 및 여타 분야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국방력의 강화를 강조
 -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추동하는 수단
 - 전략과제: 핵기술의 고도화/ 전술핵무기 및 초대형핵탄두생산 -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 및 통제관리 - 15,000km 사정권,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 군사 정찰위성 운영, 500km 중심 전방정찰 무인정찰기 추진
 - 인민군대의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
- 이러한 국방분야에서의 과제는 기존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연장선에 있고,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역시 지난 열병식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 중요한 점은, 군사 정찰위성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노이 교착' 이후, 자신들의 국방 전력 강화, 평화적 우주 이용 등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의미 - 물론, 이는 앞으로의 협상 및 국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방력 강화는 그 핵심이 평화적 환경의 마련 즉,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을 마련하고, 자체의 힘을 통해 이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본다면, 국방력 강화는 결국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전략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과학기술 - 사회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
 - 과학 연구 성과의 공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지속적인 추진
 - 과학기술-산업 연계 강화

-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들의 사회주의제도의 믿음직한 보우자로서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 데 대한 문제를 강조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 통일문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북남관계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
 - 현재의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의 시기로 돌아’ 갔음: 주목할 지점은 “남북관계의 현 냉각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될 일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민족의 운명과 후대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이러한 언급은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임과 동시에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은 북한만의 노력으로는 즉, 남한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 혹은 선언에 대한 이행과 실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편으로는 남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 없다면, 북한이 선제적인 제안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됨.

- 위의 언급은 곧, ‘근본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촉구하고,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꺼내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할 것으로 연결되며, ‘군사장비 반입, 한미군사훈련의 중지’ 등과 같은 문제에서, 그리고 평화와 군사적 안정에 대한 남북 합의서의 이행이라는 문제에서 의지와 실천을 보이라는 것으로 연결 - 이는 또한, ‘남조선을 부득불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남북관계의 회복은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있다’는 것으로 연결됨.
- ‘현 시점에서 남한 당국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북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할 것’으로 강조됨 - 그리고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과 같은 분위기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언급. 이러한 북한의 언급은 북한의 선제적인 제안이나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남한 당국의 움직임 특히, 선언의 이행 등과 관련된 움직임에 따라 북한도 대응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장 3-4월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

○ 대외관계: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외관계의 발전

- 가장 중요한 과제: ‘대외정치활동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실체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본심을 변화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 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
- 이는 곧, 북한의 대미정책이 트럼프 시기와 같은 ‘대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것, 그리고 비핵화의 문제를 대미외교의 협상 카드로 우선시하는 것에서 후퇴하고,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를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음. 이미 김여정은 2019년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를 북미 협상의 조건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더 이상 '비핵화의 진전 vs 제재 해제'의 협상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면서, '북미관계 수립 열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주장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북한의 기대나 우려보다는 미국을 상대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자, 동시에 그간의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협상의 교훈을 총화한 것으로 보임. 하노이 교착 이후, 미국이 천우신조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한 김정은-북한으로서는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미국와의 협상에서 더 이상의 양보를 통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총화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에 억매이지 않으면서 대외적 평화 환경의 마련과 자립-자력의 힘으로 경제문제 해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당 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 유일영도체계의 강화

- 특히,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강화하는 문제와 당적 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당대열의 질적 공고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언급은 결국 당 내부의 세도주의, 관료주의 특히, 부정부패 행위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당의 권위 및 본보기 단위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결국 당사상사업의 강화와 조직적 통제의 강화로 귀착됨.

- 이와 같은 문제는 단지 당의 강화, 당 사업의 강화 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기했던 경제분야에서의 문제점 즉, 문제의 원인을 주체에서 찾고, 그 핵심 원인을 사상적 문제에서 찾는 이번의 당 대회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의 문제로 귀착됨. 당 사상사업과 조직사업은 당의 조직부와 선전부에 의해 진행되며 - 여타의 당내 전문부서는 당정책 및 실무의 성격을 가진다면, 조직부와 선전부는 말 그대로 당의 사상-조직의 주춧돌을 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선전선동부의 결함과 사상교양의 형식과 방법의 혁신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앞으로 당의 선전선동부 내의 조직개편, 그리고 세대교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선전과 사상교양의 부문과 연결되어 예술, 출판 및 방송, 언론 등의 변화와도 관련될 것으로 보임. 앞서, 출판보도부문에서 ‘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을 제시하고 있고, 문화건설에서도 ‘7차 당대회의 문명국 건설’을 넘어서 ‘주체성, 민족성, 현대성’을 구현한 작품의 창작과 더불어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조선식 문명’을 건설하는 웅대한 구상을 제시
- 당 사업에서의 당적 지도, 당 정책 지도의 강화 - 당 단위의 정치적 참모부인 당위원회의 강화와 그 역할의 강화, 행정대행과 추미주의의 경계
 - 결국 당 조직사업과 당 사업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당의 당적 지도와 사업 즉, 정치적 사업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당 조직 내부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됨. 최근 당 조직지도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과 더불어, 당 조직지도부의 비대화에 따른 분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업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목할 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현시기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할 할 과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라고 규정
- 따라서 당 내 규율 강화, 사상 및 학습의 강화, 당 간부 및 당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정치이념과 사상적 좌표를 중심으로 한 사상 사업, 조직정치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것들이 경제분야에서의 성과를 위한 것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향후의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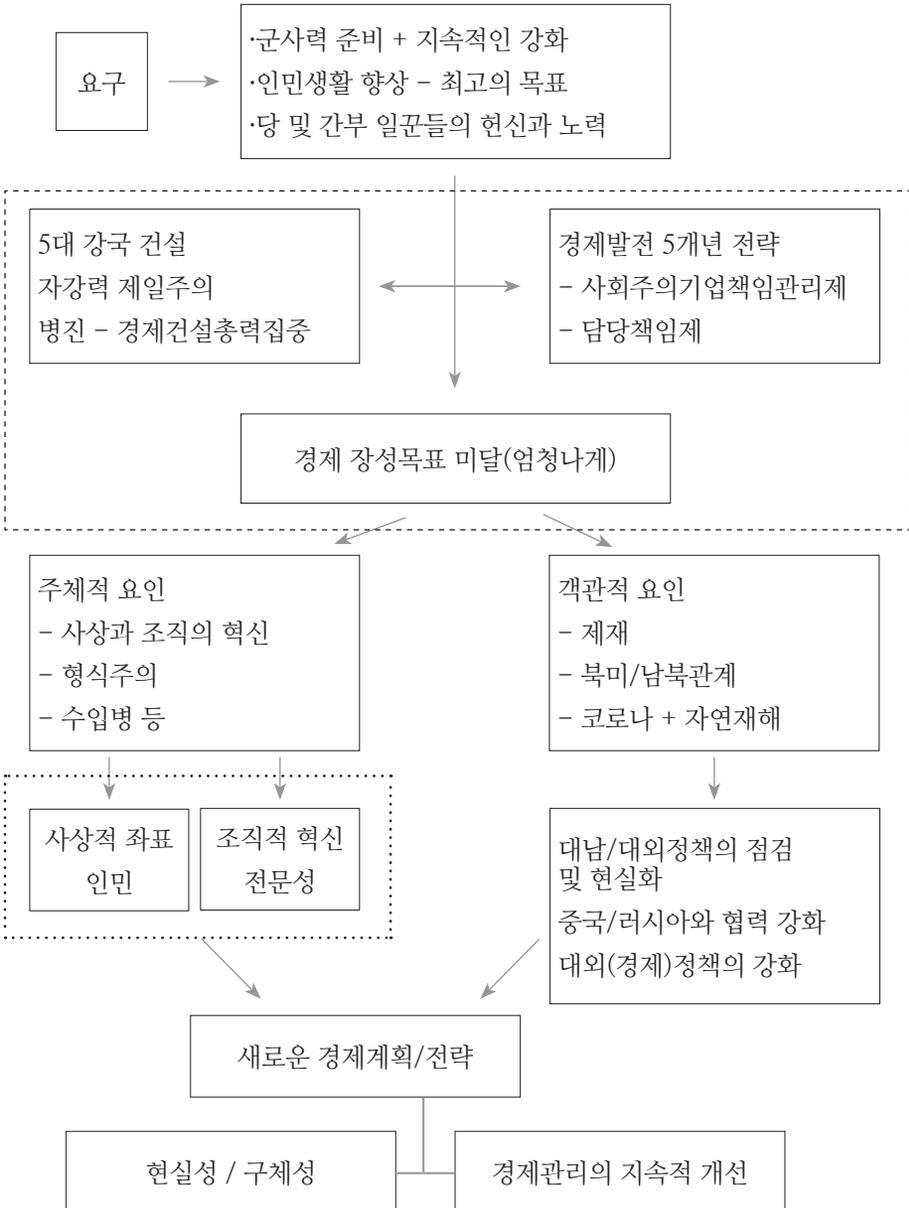
- 김정은의 보고: “모든 대표자들이 우리 당의 령도사상에 립각하여 높은 당적 책임감을 가지고 제기된 내용과 문제들을 깊이 연구토의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당 대회 기간 동안 대표자 토의 - 결정서 채택
- 이후, 전당의 토의와 결의

○ 제8차 당 대회는 지난 7차 당 대회 이후의 문제점, 앞으로의 해결책을 김정은 식으로 지적하고 보여준 것으로서 ‘김정은식 리더십’을 뚜렷하게 드러낸 대회

- 이번 제8차 당 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현실의 인정’, ‘발전의 목표’과 ‘혁신의 방도’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결국 ‘발전’을 위한 혁신의 과제를 내부의 주체적 역량의 강화에서 찾고 있는 것임.
- 주체적 역량의 강화는 크게 두 분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사상 분야와 조직 분야라고 할 수 있고,
- 사상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이념화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공식화하였고, 이를 앞으로의 당 및 국가 사업의 핵심 좌표로 설정하였음.

- 조직적으로는 이를 위한 당 내의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도부에 대한 ‘혁신’을 축으로 하여 전문성의 강화, 실력의 강화, 당적 원칙의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제7-8차 당 대회 흐름도〉



4. 규약의 개정과 의미

■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

- 1)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지도사상으로서의 성문화
 - 2) 주목되는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 - 과거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를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대체 - 김정은의 정치방식을 당의 규약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김정은식의 정치, 기본노선이 공식화되었음.
 - 3) 통일 관련한 부문에서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하면서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 - 기존의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대체한 것이자, 기존의 ‘미제 침략군, 일본군국주의 재침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지지, 전 조선의 애국적역량과의 통일전선 강화 등의 ‘남조선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음. 이는 사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부터 (멀게는 1990년대 이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간 정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으로 보임. 규약 서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로 미루어 볼 때, 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서 기존에 규정했던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이라는 규정도 변화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통일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당면하여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와 함께 남과 북의 평화적인 공존이 우선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임.

- 이러한 당 규약의 개정은 앞으로 북한의 통일방안 및 통일정책, 그리고 기존의 당 차원의 통일 관련 조직 등에서도 잇따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앞으로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국가 vs 국가’이면서 동시에 ‘특수한 관계’로서(민족내부의 거래 등)으로 규정하면서, 당면해서는 평화와 번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이를 곧 ‘통일의 과정’ 혹은 통일의 기반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요한 것은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반영하고 있음.

4) 몇 가지 중요한 변화

- 인민군에 대한 규정: 기존 제7차 당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규정했으나, 이번의 규약에서는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 -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북한은 인민군을 철저히 수령, 당,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무장력이라고 규정해왔고, 이런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에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전체적으로 ‘국가’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음.
- 전체적으로 당 조직의 개편도 규약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정무국의 비서국으로의 환원, 정무처의 비서처로의 환원 -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 직제로 개편: 총비서는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둘째, 후보당원의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이는 당원의 훈련과 규율,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그간 당의 질서와 규율 등에서의 문제점을 총화한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됨/ 셋째,

당 대회의 정규적 개최, 5년에 1회 - 이 규정은 지난 제7차 당 대회에서 삭제되었던 것을 부활시킨 것 - 앞으로 5년에 1회 열린다고 하면, 다음 당 대회는 이론상 2026년이겠지만, 2025년 10월 정도로 예상됨/ 넷째, 당중앙검열위원회의 폐지 및 당중앙검사위원회로의 통합/ 다섯째, 당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 강화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및 정치국 사회 권한 - “당 수반의 혁명영도를 더욱 원만히 보좌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민활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구현한 것”/ 여섯째,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 -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의 필요에 따른 소집과 결정, 즉, 김정은의 군에 대한 통제 및 신속한 결정을 가능케하는 규정으로도 해석/ 일곱째, 기층당조직에서의 변화 - 61명 이상 단위에 초급당/ 31-60명은 분초급당 - 기존 31명 이상 단위에 초급당, 5명 이상 단위에 당세포, 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의 31명 이상 단위에 부문당, 그리고 부문당과 초급당 사이에 분초급당 조직 - 위의 규정은 기층 당 조직을 정비하고, 현실성있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층 당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과 통제 및 현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이번 당 규약은 김정은의 정치 방식을 공식화했다는 점,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했다는 점, 당의 지도와 통제에 대한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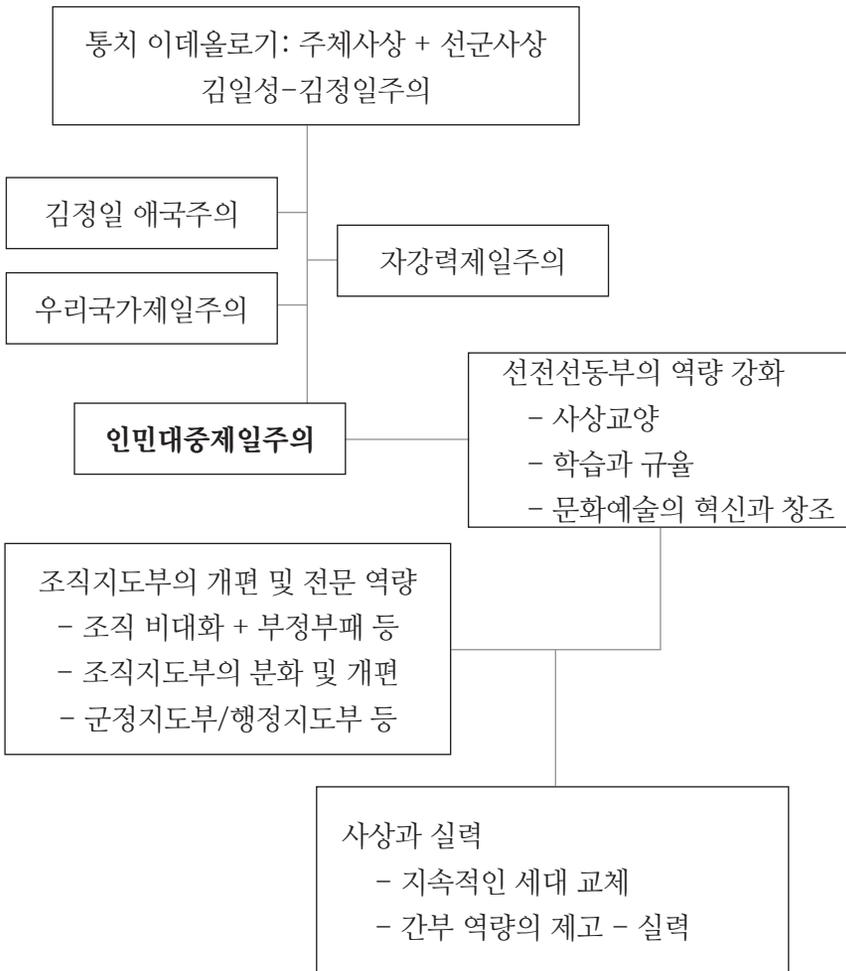
〈참고〉 당 중앙검사위원회 총화

- 재정총화: 당 재정수입 확대 -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에 의해 많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높아져 당비 납부가 늘어나고, 당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기업소의 생산이 늘어남, 또 당 출판인쇄 부문에서도 예산납부금도 증대 당 재정지출 - 재정지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들과 조선혁명박물관을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는 사업, △불멸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당 역사수룩사업, △혁명역사와 업적을 연구 고증하는 사업 등 당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집중되었으며,

필수 5대 교양 등 선전교양비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비가 증대

- 당 재정총화를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했으나, 이번의 총화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당비 납부의 증대 - 당 운영의 정상화 및 당원 참여의 정상화 등과 함께 '회의비의 지출' 증대 - 당 회의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볼 수 있음.

<통치 이데올로기의 흐름과 조직적 개편>



5. 당 조직개편

■ 당 조직 개편

○ 기존 정무국 체제에서 비서국 체제로 전환

- 김정은: 당 총비서로 추대 - 지난 2012년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으나, 이번의 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 / 김일성과 김정일은 ‘영원한 수령’
-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
 -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확인 필요
- 조용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 비서
- 사실상 조직담당 비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
- 오일정: 정치국 위원, 당 부장 / 당 군정지도부장
-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에서 탈락 / 기존 정치국 위원에서도 탈락
- 대 남: 김영철 - 당 비서에서 탈락 / 당 부장 / 정치국 위원 유지
장금철 - 통전부장 탈락
- 대 미: 최선희 -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 국 제: 김성남 - 국제부 제1부부장 - 부장으로 /
기존 김형준 국제부장 탈락
리선권 - 외무상 / 정치국 후보위원 유지

총비서
김정은

<p>중앙군사위원회</p> <p>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리병철</p> <p>위원 조용원, 오일정, 김조국, 강순남, 오수용, 박정천, 권영진, 김정관, 정경택, 리영길, 림광일</p>	<p>정치국 상무위원</p> <p>김정은,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조용원</p> <p>정치국 위원 박태성, 박정천, 정상학, 리일환, 김두일, 최상건, 김재룡, 오일정, 김영철, 오수용, 권영진, 김정관, 정경택, 리영길</p> <p>정치국 후보위원 박태덕, 박명순, 허철만, 리철만, 김형식, 태형철, 김영환, 박정근, 양승호, 전현철, 리선권</p>	<p>비서</p> <p>김정은, 조용원, 박태성, 리병철, 정상학, 리일환, 김두일, 최상건</p>	<p>중앙검사위원회</p> <p>위원장 정상학</p> <p>부위원장 박태덕, 리히용</p> <p>위원 리경철, 박광식, 박광웅, 전태수, 정인철, 김성철, 장기호, 강윤석, 우상철, 장광봉, 김광철, 오동일</p>
---	--	--	--

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재룡, 오일정, 박태덕, 김성남, 허철만, 김형식, 박명순, 리철만,
리두성, 강순남, 김영철, 김세복, 박정남, 최 휘, 김용수

■ 변화의 내용

○ 이번 인선된 인사들을 우리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물-권력기구와 비교하면

첫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인물 - 조용원, 오일정, 강순남, 오수용, 권영진이며, 탈락한 인물은 김재룡, 리만건, 최부일, 서흥찬, 위성일 등임.

- 이 중 김재룡은 정치국 정위원 및 당 부장으로 인선되었고, 리만건은 최근 당 부부장으로 호칭되었던 점으로 보아 완전 탈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당 정치국에서 새로 보임된 인물 - 조용원, 정상학, 김두일, 최상건, 오일정, 권영진(이상 정위원)/ 박태덕(정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리철만, 김형식, 태형철(정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박정근, 양승호, 전현철 등임.

탈락한 인물 - 박봉주, 리만건, 최 휘, 박태덕(후보위원으로), 최부일, 김수길, 태형철(후보위원으로)(이상 정위원), 김형준, 리호림, 조용원(상무위원으로), 김정관(정위원으로), 림철웅, 리용남, 김일철, 박정남, 리히용, 김여정, 전광호 등임.

- 거의 50%에 가까운 인물들의 교체

셋째, 비서국의 경우 새로 보임된 인물 - 조용원, 정상학, 김두일, 최상건이며, 탈락한 인물은 박봉주, 오수용, 최 휘, 박태덕, 김영철, 김형준, 김재룡 등임.

- 전체적으로 비서국은 기존 부위원장 10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었고, 7명 중 4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음/ 국제담당 및 대남담당 비서의 선출이 없음.

넷째,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경우, 새로 보임된 인물 - 정상학, 박태덕, 리히용, 리경철, 박광식, 박광웅, 전태수, 정인철, 김성철, 장기호, 강운석, 이상철, 장광봉, 김광철, 동일 등으로 거의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음.

○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당 중앙검열위원회가 당 중앙검사위원회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중앙검사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며, 당 규약의 개정에 따라 당내 규율의 강화를 전담하게 되었음. 이어진 제8차 제1기 전원회의에서도 ‘특별히 당내 규율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율 감독체계를 세우는 의제를 중요하게 토의’했다고 보도함. 김정은 역시, “당안에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뽑자면 규율 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당 제8차대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한 것은 전당에 엄격한 규율과 혁명적 기강을 세워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를 반영하듯, 기존에 보이지 않던 규율조사부(박태덕) 및 법무부(김형식) 등이 신설되었음.

- 이렇게 보면, 앞으로 당 내 규율과 질서 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이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 당에 걸친 총화, 규율 점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정치국 정위원인 정성학이 위원장으로, 후보위원인 박태덕이 부장을 겸하면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앞으로 중앙검사위원회의 활동을 정치국 차원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 만큼 당내 총화와 규율을 세우는 문제를 이번 당대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또 하나, 이번에 당의 규율과 질서의 확립의 이면에는 그간 경제관리 및 경제운영의 과정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포전담당제 등의 실시에 따른 무규율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경제관리-운영이 후퇴하기 보다는 이를 보다 더 통일적이고, 내각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됨. 총화보고에서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강조와 더불어 ‘공장, 기업소 등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강조

○ 중복 인물: 중앙군사위원회 - 정치국 - 비서국: 김정은, 조용원, 리병철

중앙군사위 - 정치국: 오일정, 오수용, 정경택, 리영길

정치국- 비서국: 박태성, 정상학, 리일환, 김두일,

최상건 / 비서 전원

정치국 위원(상무위원)을 겸하고 있음

당 부장의 겸직: 김재룡(정치국), 오일정(군사위원-

정치국), 박태덕(정치국후보위원),

김형식(정치국 후보위원),

박명순(정치국 후보위원),

리철만(정치국 후보위원),

강순남(군사위), 김영철(정치국 위원)

당 중앙검사위원회 겸직: 정상학(정치국-비서국),

박태덕(정치국 후보 위원)

- 겸직 중 비서와 부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박태성(선전선동부장), 리일환(근로단체부장), 김두일(경제부장), 최상건(과학교육부장) 등임.

○ 큰 틀에서 이번의 당 중앙기관의 개편을 보자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검사위원회의 권능을 크게 강화시켰다는 점임.

- 김여정의 탈락은 그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금까지 대미-대남 사업을 총괄해왔고, 위의 신임 비서직 중 국제 및 대남 담당 비서가 공석인 것으로 보아, 추후 이와 관련된 직위로 재등장할 가능성 높음. 또 하나, 앞으로 중앙검사위원회의 규율과 질서 확립 등과 관련해서 김여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음.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겸직현황

박태성 - 선전선동부장 / 박정천 - 군 총참모장

정상학 - 중앙검사위 위원장

리일환 - 근로단체부장 / 김두일 - 경제부장 / 최상건 - 과학교육부장

김재룡 - 조직지도부장 / 오일정 - 군정지도부장 / 김영철 - 통일전선부장

오수용 - 제2경제위원장 / 권영진 - 총정치국장 / 김정관 - 국방상

정경택 - 국가보위부장 / 리영길 - 사회안전상

박태덕 - 규율조사부장 / 박명순 - 경공업부장 / 허철만 - 간부부장

리철만 - 농업부장 / 김형식 - 법무부장

태형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환 - 평양시당 책임비서 / 박정근 -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양승호 - 내각 부총리 / 전현철 - 경제정책실장 / 리선권 - 외무상

○ 위의 직책에서 인민무력성 → 국방성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군의 당의 군대로서의 성격과 함께 ‘국가 방위력’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임. 실제 규약에서 ‘조선인민군’을 국가방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법무부의 경우, 법질서에 대한 당적 통제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판단되며, 앞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 등의 변화와 관계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 지난 12월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 법무생활에 대한 당적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고, 법기관과 법집행에 대한 정책적 지도의 강화 등을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사회 전반적인 당적 법생활 지도의 강화를 위한 것임. 이와 관련, 김정은의 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한 대목

○ 주목되는 지점은 조직지도부가 사실상 분화-전문화되어 개편된 점. 즉, 전당 및 당 조직생활을 담당하는 조직지도부와 군의 당조직을 관할하는 군정지도부로 분화되었고, 이번의 신설된 규율조사부의 경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의 지도권과 북한 체제의 안정도

사카이 다카시 (前 일본公安조사청 조사2부장)

이 글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이번 대회'로 줄임)를 통해 당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직위를 바꾼 김정은 씨(이하, 경칭 및 직위 생략)의 지도가 어떠한 이념 하에서 발휘되고 그 지도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주로 그러한 고찰에 입각하여 이번 대회 결과가 북한 체제의 안정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하고자 한다.

1.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의 지도이념은 어떻게 발휘되었나?

이절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의 지도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는 이번 대회의 의의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지도이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는 그 특징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에 따라서 '친현실성', '친인민성' 그리고 '정규화'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고 싶다.

그러한 측면은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복되며 때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리 편의상 각각의 측면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친현실성'

이번 대회 최대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해 부족한 점, 문제점을 솔직하게 지적하는 것에 역점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점일 것이다. 그러한 자세가 여기서 말하는 '친현실성'이며, 김정은 시대의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주장 가운데에는 여전히 많은 자화자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정적인 문제를 극도로 모호하게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과거의 자세와 비교해본다면 이러한 자세는 김정은 시대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에 입각해 말하자면 그러한 특징은 우선 김정은의 ‘개회사’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대해서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패배선언’이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현실성’에는 단순히 현상(現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교훈을 끌어내서 앞으로의 발전에 이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에서의 그러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 목표와 투쟁 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이러한 발상을 전개함으로써 김정은은 목표 미달이라는 부(負)의 역사를 적극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 운영 면에서 그러한 ‘친현실성’은 김정은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혹은 기타 ‘토론’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지면 관계상 김정은이 대회를 총괄하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인용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우리 당이 지난 시기의 당대회들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 자기 사업을 긍정적 면에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견지에서 랭정하게 분석총화한 것은 총결기간에 거둔 성과들에 못지 않는 큰 의의를 가집니다.”

(2) ‘친인민성’

여기서 ‘친인민성’이란 ‘인민대중제일주의’, ‘멸사복무’, ‘이민위천’과 같은 용어로 대표되는 정치자세를 말한다.

김정은의 그러한 지향은 예를 들면,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라는 제목의 2015년 10월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반복되어 강조되었고, 최근에는 작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경축열병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설에 의해 내외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러한 자세는 여러 곳에서 어필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의 당 규약 개정 에 관한 해설기사(1월 10일자)는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발전의 전행정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본태와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러한 자세는 김정은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속에서도 ‘1.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모두부분에서 “우선 총결기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는 가운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주도세 밀한 정치공세를 전개”한 것,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인민에 대한 헌신복무로 철저히 일관”했던 것,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힘을 기울이었다”는 것 등을 보고하는 것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또한, 동 ‘보고’는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도 ‘2.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 속에서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해결에서 기어이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을 천명”하고 농업, 경공업, 수산업의 진흥을 독려함과 동시에 ‘4.당 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에서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친인민적, 친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친인민성’을 철저히 주시키는 것이 이번 대회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이상과 같은 김정은의 보고를 청취한 참가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구절구절 차넘치는 보고의 내용들에 립각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현 실태를 돌이켜보면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의 견지에서 지난 시기 사업정형을 랑철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노동신문, 1월 8일자)과 대회 기간 중의 노동신문(1월 10일자)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8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 접한 각계의 반향’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전반에 일관시켜’(필자: 평안북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철), ‘친인민성, 친현실성을 참답게 구현해나가겠다’(필자: 경원군당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철)는 제목의 투고 기사를 게재한 것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당 규약 개정 등을 통해 당 검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실무부서(규율조사부)를 신설해 당내의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것도 ‘친인민성’ 중시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이 ‘결론’에서 제기한 이번 대회의 정신을 응축한 세 가지 슬로건 모두에 ‘이민위천’을 들었고 이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불식과도 이어지는 ‘일심단결’을 들었던 것은 이번 대회 기조가 ‘친인민성’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을 끝내면서 이상과 같은 ‘친인민성’의 주장 내지 어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그러한 주장에는 그것에 대한 ‘보은’을 기대하는 발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향은 결코 숨겨져 있지 않으며, 예를 들어 2020년 8월 10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인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제목의 정론은 ‘멸사복무’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멸사복무는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며 일편단심 당만을 따르려는 뜨거운 열망으로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게 한다. 멸사복무의 진한 피와 정이 하나 하나 가슴깊이 흘러들면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눈굽을 적시며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너와 나, 가정과 인민반이 일어서고 집단과 단위들이 일어서고 온 군이 일어서고 온 도가 일어난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인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권이 최종적으로는 지도부에 맡겨져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해두고자 한다.

(3) ‘정규화’

여기서 말하는 ‘정규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당의 각종 회의를 당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그때그때의 기본노선, 중요정책 등을 ‘결정’이라는 형태를 통해 구체화 해 그러한 ‘당 회의 결정’의 실천이라는 형태로 그러한 노선·정책의 구현을 도모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김정일 시대에는 말기를 제외하고 당 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위원회나 공식적인 정치국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적어도 개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것과 비교해보면 김정은 시대의 지도이념의 한 특징으로서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경향이 작년에 그 이전에 비해 보다

선명하게 발휘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회의 개최 취지에 대해서 북한의 보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2020년 7월 11일자 노동신문 논설 ‘당회의결정은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정세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회의들을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당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고있다.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가속화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

참고로 위 논설은 “자신들이 손을 들어 찬성한 당 회의 결정은 당앞에 다지는 맹세, 인민 앞에 다지는 맹세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회의 참가자에 대해서 결정의 실천을 호소했는데, ‘정규화’ 이념의 하나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2016년 5월의 제7차 대회 개최는 1980년 10월의 제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당 대회 개최라는 의미에서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 개최 및 거기서의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대회 개최 시기를 다시 한 번 5년으로 명기한 것은 ‘정규화’ 이념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의미에서 이전 대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각종 회의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개최하는 것 자체에 의의(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내 의사 통일 내지 노선·정책의 이해·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실제적인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도 그런 목적 하에 준비되고 개최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김정일은 ‘개회사’에서 대회를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그러한 의향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 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

영한 혁명적 대회, 전투적 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 대회 결정을 전당의 조직적 의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청취한 참가자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동신문의 보도도 그러한 회의에 담겨진 의도를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구절구절 차넘치는 보고의 내용들에 립각하여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현 실태를 돌이켜보면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의 견지에서 지난 시기 사업정형을 랭철하게 분석하고 있다.”(노동신문 2021년 1월 8일 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시였다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3일회의 진행’)

나아가 이번 대회에서는 첫 번째 의제에 관해 ‘보고’ 및 ‘토론’ 종료 후 바로 ‘결정서’를 채택하지 않고 신지도부 선출 후에 동 지도부에 의해 ‘당 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위원회’ 지도하에 대회 대표들이 ‘부문별 협의회’를 연 뒤에 “(동 협의회에서)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서 초안을 작성해 당 대회에 제의”하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운영되었다. 이것은 회의 운영에서의 형식성, 수동성을 극력 배제하고 중지(衆知)를 집약하는 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폐회사’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 위업의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라고 말한 뒤 “당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것을 호소하며, 이번 대회가 시종일관 ‘정규화’의 이념을 구현하는 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4) 지도이념의 목적, 배경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이번 대회에서의 김정은의 지도이념은 여러 측면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로부터 김정은이 당 대회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를 자신의 주도 하에 추진했다(알기 쉽게 말하면 당 대회의 주역을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분가·연출가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강하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김정은이 그러한 지도이념을 선택한 목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두고자 한다. 아주 인상론적이며 잠정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은 간부 내지 인민으로부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에 착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 배경에는 현대사회가 ‘지식경제 시대’라는 그의 인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한 시대에 각 개인에게 ‘창의(創意)’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그것은 외형적인 계량이 곤란한 만큼 과거 같은 강제적 내지 권위주의적인 동원시스템에 의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한 시대에 대응하여 사람들이 당의 노선·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본심에서 실천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지도이념이 아닐까 생각된다.

2. 이번 대회는 김정은의 지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절에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지도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강화되었나, 약화되었나)를 검토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지도권의 강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요 요소로서 지도자의 ‘제도적 지위와 그 실효성’ ‘실적·비전’ ‘팔로어(follower)와의 관계성’이란 세 항목을 들어 이들 요소들에 관해 이번 대회에서 그것들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각 요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이전 대회 결과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그러한 비교를 통해 김정은의 지도권을 그 역사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이전 대회와의 비교라는 측면에서 이번 대회의 특징 중의 한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제도적 지위와 그 실효성

여기서는 ①지도자가 조직 내에서 어떠한 지위(포스트)를 차지하고, 그 지위는 제도상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가, ②그 권한은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혹은 행사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착목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부여되고 있는 제도적 권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지도자의 지도권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해 조직 내에서 타당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제도적 권한은 말하자면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지도권한을 실효화하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그것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며, 그 반복에 의해서 당해 권한이 그 지도자에 갖추어진 지도권의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생각된다.

이하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은의 제도적 지위와 그 실효성이 이전 대회 및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①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전 대회에서는 당 규약 개정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에 취임했다. 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령도자’, ‘당을 대표해 전당을 영도한다’(당 규약 제24조)고 되어 있다. ‘영도’라는 단어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무제한·포괄적이며 강력한 지도권한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위원장’ 직명이 ‘총비서’로 개칭되었다. 당 규약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단언할 수 없지만, 김정은의 ‘총비서 추대’

에 관한 대회 ‘결정서’ 모두에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전당을 대표하고 령도하는 당의 수반이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당의 수반’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직명 변경은 이에 수반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변경했다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김정은이 집권 9년째가 되어 집권 직후에 말하자면 ‘영구결번’화했던 ‘총비서’라는 직명을 부활시키고 취임함으로써 오랫동안 같은 직명을 사용했던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선대 지도자들과 동격의 입장이 되었다는 인상을 내외에 심어주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수적인 것이지만, 종전 ‘위원장’이라는 직명이 북한의 각 분야, 다양한 레벨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총비서’라는 직명이 김정은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게 되었다(지방 차원의 당 지도자 직명은 ‘책임비서’, ‘비서’ 등으로 변경)는 것도 김정은의 ‘유일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②의 측면에 착목하면, 이번 대회에서 앞의 절에서 말한 대로 김정은이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의사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도이념을 크게 발휘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도·진행시켰다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권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약간 옆으로 빠지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 이후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김정은의 소위 ‘위임통치’라는 견해에 대해 소견을 말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김정은의 지도권 행사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위임통치’론에는 현실과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박봉주, 리병철, 최부일에 각각 위임했다고 하는 경제, 군사 분야에서도 직접 현지도 등을 통해 왕성하게 지도하는 모습을 어필하고 있다. 역으로 군사부문을 위임받았을 최부일이 김정은이 지도하는 군의 연습(훈련) 등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도 많았다. 즉, 특정 인

물에 위임되었을 ‘특정분야에 대한 지도 권한’이라는 것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은에 의한 각종 회의에서의 독단적인 지도 모습의 과시나 홍수·태풍 피해에 대한 활발한 시찰·지도 움직임도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부담 경감이나 책임회피를 꾀하고 있다는 견해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결과론이지만 ‘위임통치’론에 의하면 위임을 받았을 박봉주, 최부일은 이번 대회에서 은퇴하고 김여정이 ‘승격’할 것이라는 예측에 반해 정치국 성원의 지위를 상실했다.

고위 간부에 무엇인가가 ‘위임’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정 부문에 대해 독자적인 재량에 입각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의향에 따라 관계 부문에 대한 감독·독려·조정 등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목적은 김정은의 존재감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의향·지시 등의 보다 철저한 실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가운데 상무위원회 위원이 당 수반(김정은)의 위임에 의해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된 것도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실적, 비전

여기서는 당해 조직 구성원이 ①지도자가 과거에 어떠한 실적을 거뒀다고 인식(평가)하고 있는가, ②그 지도자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활동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착목하고 싶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직 구성원이 지도자의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혹은 앞으로의 활동 비전에 대해서 매력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도자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할 것이며, 반대라면 아무리 제도적 권한에 입각한 명령이었다고 해도 그 복종 태도는 소극적 내지 표면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당 대회’라는 행사에 입각해 검토한다고 하면 과거(총괄기간)의 활동성과 및 향후의 과제·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된다.

우선 이전 대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활동성과는 총괄기간이 제6차 대회가 개최된 1980년 이후라는 오랜 기간이 대상이라는 것도 있어 김정

은 개인의 성과라는 형태로는 제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의 성과에 한정해 논한다고 해도 그 최대 주안점은 계승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했다는 것이며(후계자로서의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권력승계를 무사히 마치고 더구나 강력한 후견인(장성택)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지도권을 구축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인민에 대한 어필이라는 면에서의 효과는 한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이전 대회 때까지의 시기, 경제는 대체로 순조로웠던 것으로 보이며, ‘인민생활향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전 대회에서 제시한 비전은 ‘병진노선’하에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수행이었다. 이 ‘전략’은 1990년대 초반 ‘제3차 7개년계획’이 미완으로 끝난 이후 오랜만에 제시된 비전이며, 상당히 야심적인(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전략’에 대해서 당시 간부 내지 인민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실증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나름의 고양감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번 대회에 대해서 검토한다. 우선 김정은이 제시한 실적은 무엇인가 하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명확한 것처럼 국방건설(군사력 정비)에 가장 주안점이 있었으며, 그 뒤를 이었던 것이 대외관계에서의 국가의 위신을 높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존엄’이라든지 ‘공지’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나름의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경제건설에 대해서는 성과 과시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성이 중심이다. 다만, 김정은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훈을 얻은 밑천’이라고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그 간의 역경 속에서 거국적으로 분투노력(단적인 예가 ‘80일 전투’)이나 그 결과로서의 국내의 ‘일심단결’ 강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실적’을 교묘하게 창출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제시한 비전에 눈을 돌리면 최대 주안점은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는 범위에서 이 ‘계획’의 개요는 ‘자력갱생’을 기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등에 관해서도 기존 방침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모색되었던, 소위 ‘경제관리 개선’(시장적 요소의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자세는 엿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중앙의 통제지도의 강화가 지향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 대회 결정서’ 즉 향후 5년간 각 부문의 과제 책정 과정에서 대회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어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것은 착목해야 할 것이다.

(3) 팔로어(follower)와의 관계

어떤 조직에서 지도자와 그에 복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팔로어)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당해 지도자의 지도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팔로어가 지도자에 대해서 은정 느끼고 있다거나 자신의 이해·보신을 위해서 당해 지도자의 존재가 필요·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당해 지도자의 지도에 대한 지지·종속의 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며, 반대로 그러한 감정·인식이 없고 우연히 지도자와 팔로어 관계가 되었을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당해 지도자의 지도에 대한 자세도 대체로 표면적·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간부와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각 간부가 지도부에 등용된 시기가 김정은 시대가 되어서인지, 혹은 그 이전(즉 김일성 혹은 김정일 시대)의 시기 이미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전자에 속한 간부(이하, ‘김정은 시대 간부’라고 함)는 자신의 간부

로서의 지위는 김정은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후자에 속한 간부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예외라고 하면 일단 경질·좌천되었던 자가 부활·재발탁된 경우나 김정은 시대가 되어 그 이전의 지위보다 훨씬 상위의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는 유감스럽게도 북한 인사 정보의 불투명성에 더해 필자의 작업 능력의 제약 등에 의해 이전과 이번 대회에 관한 그러한 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회에서 상무위원회 위원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이 발탁된 것이나 박봉주, 최부일 등 노간부가 신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지도부에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당 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성원, 정치국 성원의 이동이 반복되고 이번 대회 이전 단계에서 이전 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의 면면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대로다. 예를 들어 1월 6일자 연합통신 기사에 따르면, 이번 대회 집행부에 포함된 39명 가운데 이전 대회 집행부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은 김정은을 제외하면 9명밖에 없으며, 29명이 새로 집행부에 들어온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팔로어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김정은의 지도권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전 대회 이상으로 강화되었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결론: 이번 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김정은의 지도권과 체제 안정도 평가

(1) 김정은의 지도권

이상의 검토를 요약하면 김정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지도이념을 유감없이 발휘함과 동시에 그 지도권을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이번 대회는 김정은의 지도권 강화라는 면에서 이전 대회에 뒤지지 않는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다만, 그 실적·비전의 제시에 있어서 ‘인민생활증시’라는 슬로건과는 달리 군사 면에 중점이 놓여 경제면에서의 구체적인 성과 획득이 향후 과제로 남겨졌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 조금 부연하면 김정은은 대회 ‘결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말하는 한편 군사력 정비에 관해서도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핵(동력)잠수함, 정찰위성 등 이전의 범위를 초월하는 각종 신무기 개발방침을 열거한 것 이외에 ‘전민 항전준비를 완성’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군사력 정비를 핵전력에 국한했던 2013년의 ‘병진노선’을 초월해 ‘4대 군사노선’하에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군사력 정비를 추구했던 1962년의 ‘병진노선’을 방불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표명은 없지만, 사실상의 ‘병진노선 3.0’의 전개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회 폐막 직후에 대회 관련 기념행사로서는 전례가 없는 열병식이 열렸던 것도 그러한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처럼 생각된다.

이번 대회에서 군인대표 구성 비율이 이전 대회의 절반으로 줄고(19.6%에서 8.2%) 예전의 ‘선군정치’를 대체하는 형태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선이 선택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김정은의 강력한 지도권을 가지고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본질에 뿌리를 둔 무엇인가(‘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가장 요구받고 있는 것은 김정은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체제의 안정도

북한 체제가 당을 기축으로 한 것이며, 당의 권위가 그 최고령도자(현재는 김정은)의 권위와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다시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은이 지도권 강화가 더욱 진행되었다는 이 글의 검토 결과는 우선은 이번 대회가 북한 체제의 안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한다.

다만, 김정은의 지도권 강화는 북한 체제에 안정을 가져오는 필요조건일지라도 그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외래문화·정보 등이 북한 사람들에게 미칠 정신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작년 12월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정은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라고도 생각된다. 김정은 개인의 지도권을 아무리 강화했다고 해도 그런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대회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현상을 쓸어버리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은 ①당국의 단속이 그런 현상을 음성화할 뿐이며 오히려 외부 정보의 희소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동경심을 부추기는 반작용을 초래하기 쉽다는 점, ②북한 지도부가 달성하려는 ‘인민생활향상’ 정책에 의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안전과 향상이 그러한 외부 정보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거듭되었던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 외부에서는 견고하게 보이는 북한체제 내부에 잠재하는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외부 정보에 대한 강한 우려는 그 최대·최강의 발신지인 한국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난문에 대처하면서 체제 안정을 유지해가는 열쇠는 지도부가 사회의 현상(現狀)을 적확하게 인식·파악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원리·원칙에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적절한 유연성을 발휘해가는 것일 것이다. 김정은이 오늘날 수중에 넣은 강력한 지도권에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그러한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북한 제8차 당 대회(정치) 분석 토론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북한이 5년 만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했다. 북한에서 당 대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최고당의 최고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당 대회에서 논의 결정된 노선과 정책을 통해 북한의 올해와 향후 4년간의 국가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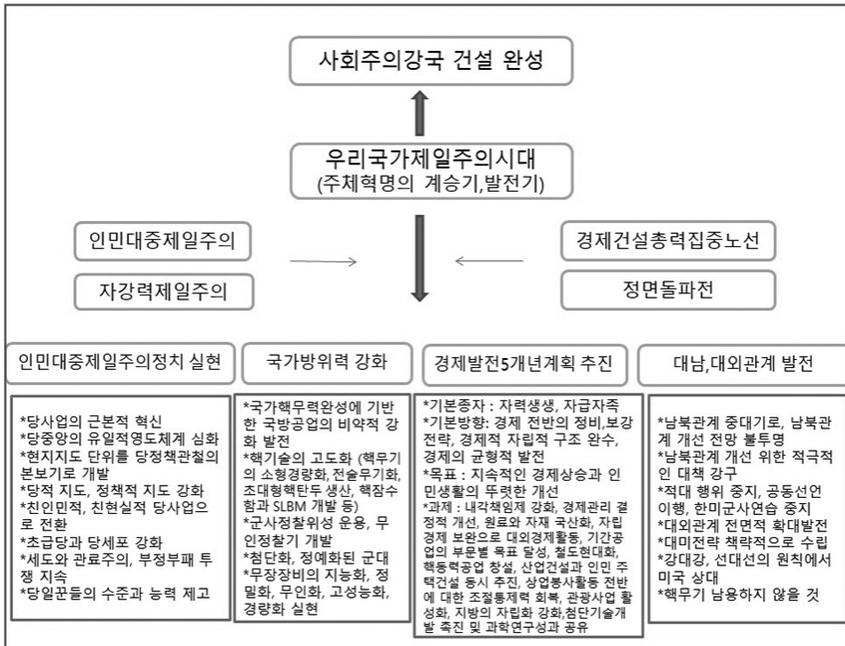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 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선포했다면, 이번 8차 당 대회는 김정은시대의 노선과 정책방향을 더욱 뚜렷하게 제시하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제7차 당 대회가 1980년 제6차 당 대회 후 36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원론’과 ‘장기적 단계’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좀 더 단기적인 정책방향과 각론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2016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무려 36년 만에 열렸다. 그 사이에 김일성 주석 사망, ‘고난의 행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 내부에는 격동적인 사건이 많았다. 당 대회 사이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7차 당 대회의 총화보고도 ‘주체사상·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등 총 5개 제목으로 나뉘 큰 틀에서 원론적인 검토와 방향성 제시가 이뤄졌다.

제7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당 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새롭게 명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권력승계 직후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규정하고, 당의 최고강령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인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명명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내세운 것과 유사한 행보였다. 북한에서는 후계자(계승자)가 선대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전 사회의 규범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업으로 설정돼 있다.

4년 뒤 제7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했다.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체계화했다고 하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를 새로이 포함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식화했다. 또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노동당의 최고강령으로 명기한 7차 당 대회의 규정을 제8차 당 대회에서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지도사상(통치사상)이 주체사상-김일성주의-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화했지만, 이러한 변화 자체가 북한의 권력구조나 통치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규정하는 ‘혁명단계’와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강조되는 실천사상과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조국통일’, ‘세계자주화’ 실현을 3대 과업으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노동당의 최고강령으로 명기했다. 또한 당면 시기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로 규정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견지해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북한으로서는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원칙과 방향 규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제7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이며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목표로 제시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는 당의 최고강령을 실현하는데 1단계 과제이며, 이 과제는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 단계의 연속적인 두 과정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곧 ‘주체혁명의 도약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8차당대회에서는 ‘주체혁명의 도약기’란 규정 대신 ‘주체혁명의 계승기, 발전기’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규정이 ‘주체혁명의 도약기’란 단계를 다시 세분화 해 도약기의 첫 시기를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용어를 변경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제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주체혁명의 계승기, 발전기’의 중요 실천사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확인하고, ‘선군정치’를 대신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웠다.

그런 점에서 제8차 당 대회에서 이뤄진 당 조직의 변화는 북한 입장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방식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위원장 직제를 다시 비서제로 환원하고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김정은 당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했다. 위원장에서 총비서로의 변화가 북한 내부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권력구조상 큰 의미를 없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북한이 설명한 대로 당 기관 뿐 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 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혼선이 초래돼 당의 권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행정기관과 구별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주목할 대목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강화와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개편 내용이다. 이번에 채택된 당 규약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명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 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했다(당 규약 27조). 이에 대해 북한은 “당 수반의 혁명영도를 더욱 원만히 보좌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보다 민활하게 진행해나가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당 운영과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당 규약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당 규약 29조), 당중앙위에 비상설 기구를 포함한 부서를 만들어 필요한 경우 당 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한 뒤 다음 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당 규약 26조) 등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정치국과 정무국회의, 전원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집단적 협의구조’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긴박한 현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당중앙위 전문부서의 개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직지도부의 분할과 당중앙검사위원회 강화, 일부 부서의 폐지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조직지도부의 분할은 향후 당 운영과 권력구조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 조직지도부는 크게 당생활지도부, 간부부, 검열부, 행정부, 군사·군수부 등을 포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열, 행정, 군사부문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확한 실상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9년 말 조직지도부 군사부와 당 군사부가 통합 또는 재배치를 통해 군정지도부가 독립부서로 만들어졌고, 2020년 8월에는 검열과 행정부문이 분리 또는 분화돼 당 규율조사부와 당 법무부가 새로 조직됐다.

특히 당의 재정관리 사업만 검사하게 되어 있는 당 중앙검사위원회에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실현에 해를 주는 당 규율 위반행위를 감독 조사”하고 당 규율문제 심의와 신고처리사업도 맡겨 권능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 중앙위 검열위원회가 폐지되고, 당 신고실도 없어지거나 축소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김정일시대처럼 최고지도자가 당 조직비서와 조직부장을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 당 조직비서와 조직부장을 공식 임명하는 조건에서 조직지도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된 부서의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이 “특별히 당내 규율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율 감독체계”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은 그만큼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해 당의 기강확립과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당 안에 당 규약과 당 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 뽑자면 규율 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해 조직개편의 목적이 당내 규율과 기강 확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계속적으로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신설 강화된 당조직을 중심으로 향후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도·시·군당위원회에 이르기까

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달성을 위해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면 대대적인 외교적 평화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남북 민간교류도 제한적이거나 빗장을 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기 때문에 남북접촉과 대화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한 북한이 ‘새로운 방식’의 북중경제협력, 남·북·미·중 4자회담, 종전선언을 매개로 대외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성공여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당 조직을 개편하고, 경제계획 달성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는 방향의 정책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의 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체제 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당 조직에 이어 국가기구와 내각에 대한 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확대 및 시장통제(사회주의상업의 강화) 측면에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무위원회의 개편, 남북대화 와 관련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 조건과 당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 및 새로운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1970년 5차 당 대회 때와 유사하다. 5차 당대회 이후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일은 새로운 지도사상을 내세우고 당조직과 운영 변화를 통해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과거 역사의 경험을 참고로 8차 당 대회를 통해 당과 권력구조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제8차 당 대회(정치) 분석 토론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제8차 당 대회 개최(정치적 기획) 목적

■ 김정은과 당의 리더십 복구 필요성

- 2019년 2월 하노이 결렬로 김정은 리더십이 손상되어 그 복구가 필요
 - 경제실패에 대한 주민설득 논리, 성과과시(국방강화, 국위제고, 코로나19 극복?)
-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서 민심이반을 차단하고 통합을 추진할 정치적 행사의 필요
 - 주민위무, 간부기강, 동원명분, 체제통합
-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 당 대회를 선제적 개최함으로써 대미압박 필요
 - 국방력 강화는 대내외 양수겸장용, ‘김정은식 전략적 인내’
- 삼중고로 정체된 현실을 ‘당을 중심’으로 혁신, 발전, 변화 추구
 - 불확실한 대외환경의 개선보다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지
 - 장기간 준비와 본회의, bottom-up 방식으로 정당화, 동원 기능 제고
 - 주민의 對黨 인식 제고를 위해 ‘투쟁하는 당, 일하는 당’ 연출

- 성과는 경제발전보다 앞선 핵무력 완성
 - ‘경제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국가건설행정의 총체적 차원에서 성패 평가해야 (당 규약에 국방력 추가 강조)
 - 제7차 당 대회 이어 제8차 당 대회에서도 최대성과는 핵무력 현대화 불가피
 - ※“국가핵무력건설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였다”

■ 제3기 김정은 정권의 국정목표

- 제1기(2012년-2016년): 김정은 후계정권 안정화, 유훈통치
- 제2기(제7차 당 대회):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
 - 36년만의 당 대회, 계승과 차별의 균형, ‘김정은의 북한 만들기’
- 제3기(제8차 당 대회): 김정은 체제 공고화(유일영도체제)
 -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 ⇒ 국방력 강화, 식의주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
 - ※ 공고화 국면 키워드: 강병, 부국, 행복
 - ※ 공고화 국면 국정과제: 새로운 상황에 맞게 당과 국가를 혁신하는 것

2. 정치분야: 당 국가체제 공고화를 위한 당 혁신

■ 김정은 시대(2012년 이후, 특히 2020년) 북한정치 특징이 그대로 투영된 제8차 당 대회

- 김정은 절대권력, 백두혈통 강화, 핵심엘리트 역할분담(김정은 부담 경감)
- 수령의 신성(神聖)을 내려놓고 감성정치 추구: 술직(배짱), 실용
- 당적 지도 강화, 당 회의체 강화로 정책의 정당성 제고, 군에 대한 당적 통제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엄간관민(嚴幹寬民) 강화
- 인사의 편의주의와 신상필벌, 세대교체

■ 김정은 권위 강화: ‘수령 공식화’

- 총비서 추대사에서 “당의 수반은 수령의 지위를 차지” 명시, 김정은을 ‘인민적 수령’이라고 칭함.
 -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밑에서 연설하지 않고 단독으로 나서서 연설하고 있음을 부각, 독립적인 최고지도자 이미지 연출
 - ※ 김여정: 당 대회 총기획? 남매정치 시선집중 부담감?
백두혈통 특수지위
-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개칭 (김정은 총비서)
- ‘김정은의 사람들’(조용원, 오일정)로 세대 교체
 - 정치국 상무위원에 80대의 박봉주 대신 60대의 조용원, 77세의 최부일 은퇴

■ 당의 성장 과시 및 당적 권위(혁명성) 강화:
일하는 당, 투쟁하는 당 연출

- 당원 617만 명 추정, 인구의 25% (1980년 6차 당 대회 약 2배)
 - 8차 당대회 7,000명(방청객 2,000명 포함) 참가
- 당 간부(당원) 엄선 및 규율 강화, 기층조직 활성화
 - 후보당원 생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처벌 조항 삽입
 - ※ 2013년 당중교환사업 진행
 - 당 간부 양성사업 질적으로 강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전사회적으로 비사회주의 척결투쟁 ⇒ 당 규율조사부 신설
 - 당 기층조직 강화: 바닥민심 청취, 당의 현장성 제고
-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 사상교양사업 강화 ⇒ 조선청년동맹?
- 군에 대한 당적 통제 더 명확히 규정
 - “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당의혁명적 무장력”
 - 당 정치국에 군부인사약진, 19명 정위원 중 6명 (과거보다 2명 정도 많음)

〈표 1〉 당대회 당대표 현황

		4차 당대표자회 (2012년)	7차 당대회 (2016년)	8차 당대회 (2021년)	비고
대표자		1,649	3,667	5,000	당중앙기관 250 각급 대표 4,750
성별	남	1,499 (90.9%)	3,352 (91.4%)	4,499 (90.0%)	
	여	150 (9.1%)	315 (8.6%)	501 (10.0%)	
참가자격	결의권 대표	1,649	3,467	5,000	당의 성장? 참석자 확대
	발언권 대표		200		
	방청자	515	1,387	2,000	
부문별	당 정치 일꾼	643 (39.0%)	1,545 (42.1%)	1,959 (39.2%)	
	국가행정경제 일꾼	353 (21.4%)	423 (11.5%)	801 (16.0%)	순서/비중 조정 경제우선
	군인	471 (28.5%)	719 (19.6%)	408 (8.2%)	군인위상 하락
	근로단체 일꾼	-	52 (1.4%)	44 (0.9%)	근로단체 비판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 부분 일꾼	67 (4.1%)	112 (3.1%)	333 (6.7%)	사회주의문명국 인민/선전선동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	115 (7.0%)	786 (21.4%)	1,455 (29.1%)	바닥민심/세대 교체/ 일하는 당
	항일혁명투사	-	6		
	비전향장기수	-	24		

■ 당 조직 효율적 쇄신: 정례화, 일원화, 시스템화, 분업화, 기동화, 현장성, 책임성

○ 당회의체 정례화

- 제7차 당 대회 성과로 당 전원회의를 비롯한 주요 당회의들 정기적 개최 제시
- 당 대회 소집 주기 5년 명기, 수개월 전 소집 발표
-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

○ 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당조직 일원화

- 당대회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정치국회의 → 정치국 상무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 선거(이전 당 대회에서 선거), 당 중앙군사위 조직

- 기층조직도 당세포(30명 이하), 분초급당(31-60명), 초급당(61명 이상) 계선 조정

※ 당 정치국 30명, 당 중앙위원회 250명

○ 당 비서 기존 10여명에서 7인체제로 정예화

-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리병철(군사), 정상학(감사), 리일환(근로단체), 김두일(경제), 최상건(과학교육)/ 국제-대남 담당 비서 삭제

- 당부장 15명: 당비서의 당부장 겸직 없앴.

※ 총비서 ⇒ 정치국 상무위원 ⇒ 당비서 ⇒ 당부장:
김정은 부담 경감 및 시스템화

- 조용원-리병철 상무위원만 당비서 겸직

○ 김정은 부담 경감 및 엘리트 역할분담 강화: 편의성 확보

- 당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부서 신설 관련 당규약 미리 수정 가능

-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대 문제 토의,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 임면 토의, 당 수반의 위임에 따라 상무위원이 정치국 회의 사회(상무위원 기능별 책임 기대: 최룡해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리병철 군사, 김덕훈 행정경제, 조용원 당조직)

- 상무위원이 분야별로 당대회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 부문별협의회 지도 (당 비서, 당 부장 부문별협의회 참여 추정)

※ 중국: 당 국가체제 특성상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은 당 중앙에 있고 '실행'은 정부(국무원)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 중앙영도소

조의 조장은 대체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아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고 구성원(조원)은 당 인사도 있지만 정부(국무원) 인사를 좀 더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부문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조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무기구인 판공실을 따로 두기도 한다.

○ 군사적 문제 토의의 기동성 보장

-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율에 관계 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추가
- 당 중앙군사위원의 역할 구분 가능, 핵관련 사안의 소수집중 가능성
 - ※ 당 중앙군사위원 13인 중 10인이 당 정치국원/ 당 정치국 회의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연달아 개최 가능

■ 김일성-김정일주의 체계화 본격 추진

○ 당 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당 뚜렷이 명시

-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 진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나간다는데 대하여 성문화
-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대하여 규제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

-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선군정치 제창 이후 선군사상으로 발전
 - ※ 2012년 4월 6일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정식화

- 곧바로 4월 11일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삼는다고 명시
- 2019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기존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라는 표현을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변경, 당규약과 헌법상 지배사상의 불일치를 해소
 - ※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주장
- 2015년 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연설, 2019년 4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연설 등 주요 행사 연설의 키워드
- 2020년 5월 8일자 로동신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이념’
- 2020년 당 창건 75주년 로동신문 기념사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선전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북한 역사를 찬양(선군사상도 동일한 선전)

Session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대외

북한의 대미정책 기조와 전략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원곤 (한동대 교수)

안경모 (국방대 교수)

북한의 대미정책 기조와 전략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1. 대미 전략 지조

○ 북미관계보다는 북중관계 강조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1월 7일 3일차 회의에서 “구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였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여기서“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방향과 정책이 대미 정책 기조를 결정하게 될 것임.
- 하지만, 제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외관계 발전 방향은 대미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대중, 대리, 대사회주의 국가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보고는 우리 당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특수한 조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뿔뿔이 떨어져서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우정과 단결을 계속 이어가야 할 시대적 요구로부터 당중앙은 5차례의 조중수뇌 회담을 통하여 전략적의사소통과 호상리해를 깊이하고 두 당사이의 동지적 신뢰를 두터이 함으로써 조중관계를 새롭게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조로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중시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진행하여 로씨야와의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꾸바와의 평양 수뇌상봉과 월남과의 하노이수뇌상봉을 통하여 사회주의 위업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땀어지고 검증된 쌍무관계를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연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 북한의 대중국 정책 강화 모습은 제8차 당대회 기간 중 소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의 축전과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 축전에서도 잘 나타남.
- 결국 제8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대미정책 기조는 2019년 12월의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당시 투쟁 구호는“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이었음.

○ 국방력에 의한 대미 억제와 공세적 외교전

- 8차 당 대회의 대미 정책 기조는‘군사적 억제’와‘공세적 외교전’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는 2019년 12월 전원회의의 ‘정면돌파전’이 국방과 외교의 결합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대립을 준비하는 것임.
- 당시에도 전원회의 결정서의 넷째 항목에서 “넷째,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라고 정치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정면돌파전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음.
- 우선 대미 정책의 기초로 강력한 국방력에 의한 군사적 억제를 강조하고 있음.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첨단무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우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있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짓은 없다. 현실은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

이 강화하여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에서 제기한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과업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명으로 된다”

- 국방력 강화의 모습은 ‘조선로동당 규약개정 결정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

- 하지만, 북한은 따라서 당분간은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공세적 외교전’의 형태로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됨.

“우리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 발전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 북한은 공세적 외교전을 위해 대중 외교에 집중하여 미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는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을

직하게 담보하는 것을 현 시기 대외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였다.”
“보고는 대외사업 부문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당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국가의 대외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켜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대미 정책과 북미관계의 인식과 방향

가. 북미관계

○ 북미정상회담은 성과로 높이 평가

- 제8차 당 대회는 사업총화보고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자주적인 북미관계 형성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상당히 높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

“당 중앙위원회는 총결기간 조미사이의 력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훌륭히 과시하였다. 적대적인 조미관계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직접회담에서 당 중앙은 강한 자주적대를 가지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내었다. 초대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적 리익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만천하에 시위한 여러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은 세계정치의 특대사변으로 되었다. 총결기간 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인민의 굴할 줄 모르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공화국이 비축한 위대한 힘에 의거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위상을 크게 올려 세웠으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 위대한 우리 인민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

○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기간은 ‘엄혹’한 환경과 ‘최악의 형세’로 인식

- 제8차 당 대회가 북미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난 5년간 기간 중 엄혹한 대외환경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주로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됨.

“미국의 발악적인 공세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필사적인 압박봉쇄책 동으로 하여 총결기간 우리 공화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건국 이래 류례를 찾아볼 수 없이 엄혹하였다. 최악의 형세 속에서 당중앙위원회는 자주적 대를 더욱 강하게 견지하면서 나라의 최고리익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혁명적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고 자주권 존중을 떠난 우리와의 관계개선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각인시키였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낮은 기대치

- 북한은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북미관계의 근본적 구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바이든 신 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

“보고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 자주력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전제조건

-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임을 언급하면서 향후 북미관계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

“보고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지역의 긴장격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진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보고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 미국의 대북 제재의 영향성 인정

- 제8차 당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에서 북한은 경제적인 목표 미달에 미국의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더불어 자연재해와 코로나-19의 영향성도 언급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객관적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우선 객관적 요인으로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의 후과를 들었다. 이밖에 해마다 들이닥친 흑심한 자연재해와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도 경제사업에 심각한 장애로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 평화협정 관련 언급 전무

- 제8차 당 대회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북미협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언급되었던, “미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음.

○ 대미 라인의 약화 가능성?

-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여정, 최선희의 지위 강등으로 대미라인의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국내외 해석이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음.

- 김여정은 작년 중반 이후 모습을 크게 드러내지 않다가 이번 정치국후보위원회에서는 탈락했지만, 당 중앙위원은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당대회 집행부에 포함되었으며 주석단에도 자리를 하고 있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있었음.
- 최선희는 당 중앙위원에서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지위가 강등되었지만, 여전히 외무성 제1부상으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음.

나. 핵 정책

○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 핵 능력의 지속적 강화를 강조

- 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핵능력 강화에 대한 언급만 강조되어 있음.
- 이는 미국의 협상전략 변화가 없이는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됨.

“핵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1만 5000 km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가까운 기간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할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켓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장거리타격능력을 제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다”

- 이러한 정책은 병진노선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며, 2018년 4월 20일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의한 경제집중의 방향성은 약화되는 모습임.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전쟁피수인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열되고 이 침략세력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특성은 인민의 안녕과 혁명의 운명, 국가의 존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작한 핵무력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당 중앙은 력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즐기차게 령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다.

- 스스로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7차 당 대회의 ‘동방의 핵대국’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핵군축 협상에 대한 의지를 암시

“총결기간 당 중앙위원회는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였으며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였다.”

- 핵무력 건설과정을 ‘강행돌파전’으로 언급하고 병진로선 관철 강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은 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위한 강행돌파전을 작전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병진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것과 함께 국방과학자들과 핵과학자들을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 결사대로 준비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조직전개하였다.”

○ 핵전략은 ‘핵방패’의 ‘전략적 억제’와 선제불사용 원칙 강조

- 북한은 핵전략에 대해 ‘핵방패’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억제’의 개념으로 이해됨.

“당 중앙의 직접적 지도밑에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들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케트들이 특유한 작전

적사명에 맞게 우리 식으로 탄생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상을 주었으며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하고 그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략적 억제력을 굳혀나갈수 있게 하였다.”

- 북한은 과거 핵 선제타격을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핵무기 선제불사용의 원칙을 재확인함.

“또한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것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 원자력을 산업 에너지로 활용가능성 언급

- 분명하지는 않지만 핵능력을 군사적 용도를 넘어 산업에너지로 활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함.

“보고에서는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수력발전소건설에 국가적 힘을 집중하며 핵동력공업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이 언급되었다.”

- 만약 북한이 원자력 에너지의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 핵문제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다뤄지게 되어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며, 비핵화 협상에서도 에너지 보상과 지원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제8차 당 대회와 군사안보적 의의와 특징

○ 당 국가 체제와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변화’

- 2020년 제재국면 하 ‘정면돌파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최소한의 목표 달성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판단, 8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긴급히 열어 5개년전략(2016~2020)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8차 당대회 개최 결정 및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시로 돌파구 마련

*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제7기 6차 전원회의)

- 당 대회의 정기적 개최(5년)를 당 규약에 재명시한 것은 당국가 체제가 정상화되었고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5년 후 ‘제9차 당 대회’ 개최(2025년 하반기 예상)에 대한 자신감 표출

* 지난 당 규약(2019.9 이후)에는 당대회 개최 간격을 삭제하고 "당대회소집날자는 여섯달전에 발표한다" 라고만 되어있다가 이번에 당 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당 대회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

○ 김정은 통치 10년간 ‘탈군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 전반 체질 개선의 노력과 김정은식 통치방식의 안착으로 김정은 정권 2기 안정적 운영의 일대 전환점 모색

- 병진로선이 발표된 1962년 이후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 전반에 군사(우선)주의(화)의 폐단에서 벗어나 경제중심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실질적 전환

* "강위력한 최신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입니다."(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김정은 연설)

-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단위별 임무와 책임을 중요시 하는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 방식을 통한 국가운영으로 김정은의 부담을 덜면서도 통치권한은 강화

- 제8차 당 대회에서도 사업총화 보고 및 토론에 이어 바로 결정서를 채택하지 않고 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가 부문별협의회들을 통해 종합한 의견을 심의 반영하여 채택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결정내용에 대한 재학습을 통해 실천과 책임을 강조함.

* 정면돌파전을 선포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과거 일방향의 신년사 발표를 대신해 관련된 부분별 인원들을 최대한 참석시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여 실천과 책임을 극대화

- 군사 관련 당 규약의 변화를 통해서도 ‘군사주의화’ 탈피와 군의 역할 및 위상 변화 식별

* 과거 당 규약에서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인민군대의 본질적특성과 사명에 맞게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고 규정

* "29조에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 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새로 보충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한 만큼 군사문제를 중요하고 신속하게 다루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최고지도자의 당을 통한 군통제가 그만큼 간소화되어 강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강조는 과거 병진로선으로 단순 회귀가 아닌 정상적인 병진로선 2.0으로 진화

- 지금까지 정권생존적 차원에서 인민경제를 희생하고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군사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온 것은 "가짜 병진로선"이었음.
- 국가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방위력 강화에도 재원을 충분히 배분하겠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안보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진짜 병진로선"으로 발전이자 변화임.
- 과거 병진로선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경제 중심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하에서 군사력은 군사전략 차원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국가 생존과 발전전략 차원에서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것으로 평가함.

*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하였다."

■ 제8차 당 대회를 통한 ‘국가방위력 강화’ 강조 의도

○ 7차 대회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로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국방력 강화를 부각

-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들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케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초대형수소탄개발 완성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 형시험발사로국가핵무력건설 완성을 가장 큰 성과로 자평하고, 지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공개한 11축발사차량에 실린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까지 언급함.

*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4년만에 그리고 당 제7차 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1년만에 빛나게 실현한것은 력사에 다시없을 기적이며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후대들앞에 세운 가장 의의있는 민족사적공적"

- 국방과학부문에서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켓,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등 새로운 첨단핵전술무기와 신형탱크, 반항공로케트종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 성과를 크게 부각

- 다탄두개별유도기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핵잠수함설계연구의 최종심사단계,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 완성 등 현재 진행 중인 국방과학연구부문 성과도 대범하게 공개

* "중형잠수함무장현대화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 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2019년 7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 보았다는 새로 건조한 잠수함은 신형이 아닌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 맞는 것으로 평가

○ 8차 당 대회 총화 보고 중 향후 추진해 나갈 5년간 계획을 밝힌 ‘2.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에서도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을 언급하며 국가방위력 강화를 강조

- 전술핵무기 개발 및 초대형핵탄두생산, 1만 5,000km 사정권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 등 핵기술 고도화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제시
-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기존 액체연료엔진 ICBM에 추가해 고체연료엔진 ICBM, 핵잠수함과 핵탄두 SLBM 개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상정
-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를 위해 무인정찰기와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을 언급하고 있어 조만간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함께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12월 2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진행됐다"고 보도함. 북한은 2014년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처음 개최하였으나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는 개최하지 않음. 북한은 2016년에 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선포하면서 조선우주협회를 출범시킴.

- 제8차대회 군사부문, 군수공업부문협의회와 김정은의 결론에서도 국가방위력 강화를 재차 강조함.

*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겠습니까.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것을 다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우리 당의 력사적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하여야 합니다. "

○ 당 대회 전반에 국가방위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강조한 것은 대내적 의도가 우선

- 북한의 군사분야 강조에 대해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 시사를 통한 대미/대남 위협이거나 대화를 요구하는 압박이자 몸값을 올려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양보를 요구하려는 대외적 의도로도 평가가 가능함.

-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 대회는 내부행사로 인민들에게 지난 기간 계획한 것의 성과를 평가받고 다음 목표를 제시해 안정적으로 통치를 지속해나가는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자리이며, 최고지도자는 당 대회 앞에서 인민들에게 보고하는 책무를 지님과 동시에 권리를 갖는 노력이기도 함.

- 당국가가 당대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 두 부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군사분야 성과를 부각한 것은 지난 7차대회 총결 기간 경제성과의 미흡을 군사분야 성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과 이상으로 8차 대회 이후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계획에서도 군사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안보적 차원에서 안심을 주고 경제발전엔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것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대회 결정관철에서 이룩한 가장 뜻깊고 긍지높은 대승리이다."**

○ 국가방위력 강화 계획의 공개는 현실적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연관

- 통상 초기 계획단계의 군사무기 개발은 비밀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상세하게 공개 강조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임.

- 지난 5개년전략의 수립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비현실 계획으로 인식하고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제재 지속과 예기치 못한 재해 상황 등을 고려 반영 눈높이를 낮춘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음.

*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 5년 후 경제 분야의 목표를 하향 조정한 만큼 기대치를 군사분야로 대치하면서 대외적으로 몸값을 올리는 효과까지도 가능함.
-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군사분야 계획은 대부분 초기 단계로 개발 및 완성에는 상당 시간과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수립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계획과 달리 오히려 국가방위력 강화계획은 과장된 장밋빛 희망으로 평가

■ 북한의 ‘국가방위력 강화’와 대남·대외관계와의 연관성

- 국가방위력 강화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에게 돌리며 지속 추진의 명분을 만들어 대남/대미관계와 연계
 - 북한을 겨냥한 첨단무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위력을 강화해야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강조

-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당성 주장
 - 당규약의 대남과 대외부분 개정과 국가방위력 강화를 연결하여 향후 대남 및 대미 정책 추진에 있어 논리적 모순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대남과 대미분야에 있어 북한의 발표내용은 대단히 절제된 것으로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보기는 시기상조이나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의 장벽이 더 높고 두터워진 것으로 보임.
- 남북관계에 있어 “엄중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만을 놓고 보면 접촉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몇 구절만으로 북한이 미련을 남겼다가보다 대남과 대미관계에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 스스로 발언에 빠져나갈 여지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먼저 긍정적 제안을 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현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와 남북합의 미이행으로 규정
- 남한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남북관계개선에 관심을 끌려하고 있다고 지적
 -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요구를 외면하고 남북합의이행에 역행하면서 남한의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의 해명을 요구함.
 -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

발점으로 돌아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북한이 과연 이번 정부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지 의문임.

○ 당 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적 안정과 통일 언급

- 당 규약 전문의 대남통일부분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며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변경되었음을 보도

* 지난 당 규약(2016.5)의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장에 상당부분 변화 예상

- 변경된 문장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보다 분명하겠지만 과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삭제하고 남북의 특수한 관계라는 현실적 인정 속에서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안정과 평화의 공존 속에서 발전과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향후 통일전선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도 예상 가능

○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

- 대외정치활동을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서 미국이 미중 전략적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과 중국과의 대결우위를 상실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어 대미 장기전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하면서도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 이 문장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표출함.

○ 중러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변화하면서 보편적 국제사회 규범(국제적 정의)에 맞는 국가의 대외관계를 확장을 통해 미국과 제재와의 장기 대결을 준비

-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립장이 명시”하였다고 언급

- 북미관계라는 양자적 접근보다 북중 및 북러협력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면서 유엔에서 대북제재해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높음.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 국가발전계획 간 전략적 결합 등 8차 당 대회에서 발표될 북한의 발전전략이 폐쇄적인 경제개발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보편적 규범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

■ 북한의 ‘국가방위력 강화’ 전망과 정책 제언

○ 제8차 당 대회 이후 경제에 집중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방위력 강화 행동이 현실화 될 우려

- 북한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보거나 남측의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해 핵심인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을 안심시키고 군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위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무력 강화와 함께 선택적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 사업을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임.

* 2021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기 전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이유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쌍중단(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연합훈련의 중단)을 미국이 먼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열병식에 공개한 북극성-4형의 실제 잠수함 발사나 신형 ICBM 지상 연소실험과 제한된 사거리 발사, 인공위성(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

- 북한 핵무력을 비롯한 군사력의 질량적 증가로 인한 향후 비핵화 협상의 복잡성 증가와 제한적 핵보유국 전략 하 핵군축 협상 주장 가능성

- 북한은 현재는 물론 미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조건부 핵무기 보유국 전략’

-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인 평화체제 구축(종전선언/평화협정), 제재 해제, 북미관계 개선(수교)라는 상응조치 간에 정교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질량적 증가는 비핵화를 위한 합의 및 이행 범위를 결정하고 프로토콜을 정하고 시퀀스를 정하기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음.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는 군비통제적 접근과 해법이 요구

- 이번 김정은 보고에도 국가방위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에 대해 소상히 나와있고 대남 및 대외부분에도 언급 연결되어 있음.

* "이 행성에 우리나라처럼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만큼 평화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갈망은 매우 강렬하다. 우리가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는것은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것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것이다."

- 경제적 접근, 평화경제가 아니라 군사안보적 접근 평화안보의 개념이 필요하며 남북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도 군비통제적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고민이 필요함.

북한 제8차 당 대회(대외) 분석 토론

박원근 (한동대 교수)

■ 1월 8차 당 대회 개최 배경과 대미 전략

- 북한은 작년 8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계획된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하여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내적 문제도 있으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결과 재재가 지속되는 요인이 더 크다. 새로운 경제계획을 선포할 공간과 내용이 충분치 않을뿐더러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북한이 1월에 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외 정책, 특히 대미 전략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은 제재, 코로나, 홍수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국경 봉쇄로 인해 생명선인 중국과의 교역도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2021년을 '정면돌파'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1월 당 대회를 통해 대미노선을 발표하고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도권' 행사를 모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노선을 선제적으로 밝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 이러한 배경하에 북한은 강경한 대미정책을 8차 당대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북한의 대미정책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선 바이든 신행정부와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의미 있는 관계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미국을 "전쟁괴수",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킬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요구한 것처럼 미국이 발전권과 생존권을 아우르는 적대시 정책을 선제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표명한 것이다.

- 둘째, 핵 포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핵을 최대한 고도화 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과 계속되는 발전”,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군력강화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면서 “우리의 국가방위력은 새로운 발전의 궤도를 따라 부단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따라 핵무기 소형화, 전술무기화를 선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 제고, 다탄두 미사일 및 초음속 미사일과 핵잠수함 개발,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의지 등도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작년에 시험한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신형무기체계를 ‘첨단핵전술무기’로 지칭한 것이다. 전자는 위성발사로 칭하면서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겠다는 예고로 볼 수 있다. 신형미사일을 핵전술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재래전과 핵전의 구분 없는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단순한 무력 충돌이 핵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 종합할 때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핵보유 의지를 넘어서 극도로 고도화된 핵능력을 지속 개발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은 반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상”으로 북한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군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선제적 조치,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대화 재개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 대남관계도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 대남관계를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규정한 후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한국의 군전력발전 계획 이행의 중단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지속하여 제시하는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등도 “비본질적인 문제”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지속된 것이다. 북미관계 하에 남

북관계를 두는 것으로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선 철회 없이는 의미 있는 남북관계는 없음을 재천명한 것이다.

- 북한이 밝힌 대남정책은 대미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한국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연합훈련의 경우, 올 3월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큰 어려움은 북한이 제기한 ‘첨단공격장비 반입’ 문제로 한국의 전략증강 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중단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향후 대미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써 대남 공세를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볼 수 있다.

■ 북한 행보 전망

- 북한이 대미관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경한 정책을 발표하였다면 향후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과 이로 인한 트럼프 탄핵 정국이 연출되면서 행정부 출범 후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100일의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없을 수 있다.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로 인해 상하원과 대선을 다 이겼으나 공화당이 여전히 트럼프 지지층을 의식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 자신도 수차례 밝힌 것처럼 미국내 ‘민주주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고 해결이 난망한 대외 문제는 최소 1년 이상 현상유지로 ‘관리’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
-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당대회를 통해 핵의 비중을 극도로 높인 ‘핵무력 우선 경제개발 차선 노선’, 혹은 ‘핵 및 경제병진 노선’을 소환하여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 든다. 다만 균형점을 넘는 도발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귀착하는 것은 피하려 할 수 있다. 제8차 당 대회에 표출된 대미와 대남정책을 비교하면 대미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대남 정책처럼 구체적 요구를 밝히지는 않았다.

- 따라서 북한은 향후 압박을 가하되 트럼프 시기 금지선에 해당하는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ICBM 시험 발사는 기술적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역내 미사일 방어체제 보강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중국의 이해도 얽혀있으므로 북한이 삼갈 수 있다. 대신 이미 예고한 것처럼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공세이다.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북한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에 우선순위로 올리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8차 당 대회 때 대남관계에 문제로 삼은 사안을 명분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 한국의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1조 1항 준수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남북은 1조 1항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통해 제기한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반입목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는 주장을 근거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 북한의 전술핵무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재래전력의 핵전력화는 한반도와 같은 좁은 전장 환경에서 더욱 쉽게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선포한 이상 한국과 한미동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최대한 단기간에 확충해야 한다.
-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억지 전략을 심도 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미간 차이가 분명 존재하므로 이를 최단기간 내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대북정책 방향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검토와 인사 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북한이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 더 이상의 일방적인 대북 제안은 의미가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긴 호흡으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일방적 대북 제안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가져옴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더불어 무조건적 포용은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대미 공조를 약화시킨다.

북한 제8차 당 대회(대외) 분석 토론

안경모 (국방대 교수)

Q: 8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국방부문의 전략과 방침은 2018년의 ‘새로운 전략노선’ 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가 지속을 의미하는가?

A: 조건부이긴 하나 아직은 이탈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1. 새로운 전략노선과 정면돌파전

- 2019년 12월 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선언된 정면돌파전은 2018년의 “새로운 전략적노선”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필요
 - “새로운 전략적노선”의 핵심은 안보에서 복지, 혁명에서 발전으로의 비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 2018년의 비핵평화프로세스는 새로운 전략노선의 관철을 위해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수단의 성격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위해’ 대외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며 내세운 목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주목
 - 정면돌파전이 선언된 12월 5차 전원회의의 보고에서는 “병진의 길을 걸을 때”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을 명백히 구분함으로써 여전히 ‘새로운 전략적노선’이 유효함을 재확인
 - “정면돌파전”의 핵심은 경제부분을 “기본전선”으로 하고, 국방부분이 이를 담보하여 “재제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힘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

2. 정면돌파전과 ‘새로운 방위전략’

-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새로운 전략노선의 조속한 실현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력갱생’과 ‘신북방(삼각)관계’의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장기전’의 구상인 정면돌파전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전략을 조정하기 시작
- 정면돌파전이 제시된 7기 제5차 전원회의 일주일 전 개최된 7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해당 대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4차(2020.5.24.), 5차(2020.7.19.)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새로운 방위전략’(또는 획기적인 방위전략)

〈제7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구분	주요 내용
1차 (2018.5.18.)	<u>제 7기 제 3 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u> 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무적의 총창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 <u>사회주의경제 건설</u> 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혁명의 전위대오,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
2차 (2019.9.7.)	태풍 13호 복구 관련
3차 (2019.12.22.)	당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u>조직기구적인 대책</u> ! 일주일 후 열린 5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어 2020년 3월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군정지도부’와 관련된 논의였을 가능성 농후 들이 토의결정 [...] <u>자위적국방력</u> 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 [...] <u>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u> 하기 위한 부문별과업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새롭게 제시되었다. [...] <u>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u>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배치를 변경시키는 <u>중요한 군사적문제와 대책들이 토의결정</u>
4차 (2020.5.24.)	<u>자위적국방력</u> 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u>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더욱 완비</u> 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 <u>핵전쟁억제력을</u> 더한층 강화하고 <u>전력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u> 제시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u>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u>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5차 (2020.7.19.)	나라의 <u>전쟁억제력을</u>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u>핵심문제들을 토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u> 있었다. 회의에서는 <u>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u> 하였다.
6차 (2020.9.9.)	태풍 9호 수해 복구 관련

- 새로운 방위전략의 핵심은 크게 전략, 전력, 조직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전략

- ‘핵억제력 강화’와 ‘포병 전력을 통한 화력 보강’으로 구성된 두 축의 비대칭적 국방력 강화를 통해 대칭적인 군비경쟁의 소모적 함정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과 억지력을 강화³
 - 북한은 현재 미국의 전략을 소모전, 고사전략으로 판단
-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두 개의 모라토리움으로 구성된 레드라인은 넘지 않음으로써 협상의 여지는 남겨둠

나. 전력

- 핵억제력 지속강화
- ‘포병 전력을 통한 화력 보강’
 -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북한판 에이태컴스(KN-24), 신형대구경 조종방사포, 초대형 방사포(KN-25)의 개발과 실전배치를 통해 보병과 기계화부대 등 ‘기동’ 전력 중심의 병력집약형 군구조보다는 포병전력 중심의 ‘화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화³

1. 일주일후 열린 5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어 2020년 3월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군정지도부’와 관련된 논의였을 가능성 농후.

2. 해당 회의에서 핵무기와 포병전력을 결합하는 ‘전술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을 가능성 농후. 또한 해당 시점이 2020년 3월 3일자 김여정 담화를 시작으로 6월 16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귀결되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시기였다는 점 역시 주목을 끄는 지점임. 그러나 현대핵전략의 발전과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 주한/주일미군의 존재를 고려할 때 전략핵무기는 대미용이고 전술핵무기는 한·일 용이며 따라서 8차 당대회 총화보고에 언급된 전술핵무기의 개발이 핵전략에서 남한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뀐 결과라는 판단은 좀 더 신중할 필요.

3. 김태현, “북한의 국방,” 『2021년도 안보정세전망』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기타: 특수전 전력 강화, 기존 무기체계 선택적 현대화

다. 조직

- 2014년 신설된 전략군과 최근 지속 강화 및 재편되어온 포병 조직을 활용한 핵무기와 화력전력의 실전배치 가속화
 - 포병 출신의 박정철을 원수이자 격상된 총참모장으로 중용하고 있는 점 주목
 -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영된 동기훈련(1기 전투정치 훈련)을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새로운 ‘화력작전 전술체계’”등이 강조되었으며 포 부대에 2020년 2월 말까지 각종 신형방사포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태양절까지 적응 훈련을 마칠 것을 명령했다고 전해짐.
- 조직적 변화를 통제하고 군을 검열할 새로운 조직으로 2020년 3월 ‘군정지도부’ 설치

3. 새로운 전략노선, 정면돌파전, 그리고 8차 당대회

- 8차 당 대회는 큰 틀에서 안보를 전제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의 기조유지
 -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 하에 8차 당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로 등장하며 선군을 대체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혁명과 안보에서 발전과 복지로의 방점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의 기조 반영
 - 비중으로 봤을 때 총화보고에서는 물론이고 결론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음.
 - 내용적으로도 경제건설의 최우선성과 외교 강조
 -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

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보고)”

-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합니다. 우선 경제전선의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결론)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는 당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을 다시한번 고조시키고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폐회사)

4. 제8차 당 대회의 국방전략

- 기본적으로 ‘새로운 방위전략’의 지속으로 핵억제력 강화, 군 현대화,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등의 내용 제시
- 핵 억제력 강화
 -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초대형핵탄두생산, 명중률제고, 사거리 개선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SLBM, 다탄두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통한 핵 선제타격능력과 보복타격능력 강화 추진
- 현대화
 - 인민군대를 재래식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 당의 통제 강화

- 조선로동당화된 혁명적당군이라는 표현 등장, 당규약 개정에서도 당의 군대로서의 표현 강조, 오일정을 파격승진시켜 군정지도부장이자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줌.

5. 정책적 함의

- 북한의 의지와 선호가 새로운 전략노선의 지속에 있다하더라도 ‘물리적 능력에 기반한 구조적 평화’이건 ‘적대성의 완화를 통한 관계적 평화’이건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 불가
 - 중국의 경우에도 핵역지력(1975-6년 광과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동평-4를 개발해서 배치하기 시작, 1981년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한 동평-5 배치)과 적대관계 개선(1978년 중일평화우조약, 1979년 미중수교)을 통한 안보의 확보가 개혁개방의 전제이자 원동력으로 작동
 - 이와 같은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북한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대립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주변국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 극히 희박
- 안보불안과 개혁개방의 양립불가능성 속에 안보와 복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은 안보를 선택할 것이 확실시되나 이는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상황
 -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선택이 병진의 방향으로 경사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줌.
 - 미중갈등과 북중밀월 속에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지를 ‘일정부분’ 달성하는 B플랜의 가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지점

- 중국은 시진핑과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축전을 보내는 등 성의를 보였으며 북한은 조중친선을 강조하고 국제부장에 대표적인 대중국 라인인 김성남 국제부 제1부부장을 임명

○ 시간이 핵심적 변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의 손익계산이 바뀌기 전에 행동에 들어갈 필요

- 미국발 핵군축론의 부상은 양립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되거나 해당 경우 한국의 안보가 방기될 우려⁴
- 회색지대전략, 즉 안정-불안정 딜레마(security insecurity dilemma)를 활용한 북한의 ‘한반도 분쟁지대화’ 옵션 역시 매우 우려되는 지점⁵
-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것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것이다”(보고)
- 북한은 새로운 미 행정부에서 정책우선순위가 밀리고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올 경우를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급격한 위기로 가능성 농후
- 도발방식과 관련해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대신 정찰위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무기, SLBM, 핵잠수함, 핵동력공업 관련 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들이 총동원될 가능성

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1971.html>.

5. 회색지대는 평화(White)와 전쟁(Black) 사이의 영역을 의미하는 바, 회색지대 전략은 현재 상태에 불만을 가진 행위자가 현상유지세력을 상대로 국지도발 또는 국지적 분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익의 확대를 시도하는 제한된 현상타파 시도라 할 수 있음

Session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대남

북한의 대남정책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북한의 통일전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철 (송실대 교수)

북한의 대남정책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관계의 현상을 “판문점 선언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규정했다.

김정은 당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 당 위원장이 보고에서 말한 대로 “북남관계의 현 랭각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 김정은 당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의 가장 명확한 노선은 ‘국방력의 강화’이다. 이것은 단순한 재래식 무기의 강화가 아니라 전략핵, 전술핵을 포함한 핵무력을 다양하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핵무력의 전면적 고도화’를 명확하게 한 상황 하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남북관계는 호전되지 못한다.

북한은 작년 6월 16일 판문점선언에 입각해 개성에 설립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6월 9일 ‘보도’에서 당시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보여준 대남정책은, 전술핵의 개발 지시 등을 보면 남북이 대화와 화해로 전환됐던 ‘3년 전의 봄’으로 돌아가려는 정책

이러기보다 이 ‘보도’처럼 이미 ‘대적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정은 당 위원장은 제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대화노선을 제시했던 2018년 정월을 지나쳐 2017년의 북미대립, 남북대립상태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대화환경 양성조치를 ‘비본질적’ 이라고 거부

김정은 당 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방역협력, 인도적 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의)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비본질적인 방역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개별관광을 꺼내지 말고 한반도의 본질적인 문제인 최신 스텔스전투기 F-35의 한국배치나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면서 ‘적대행위의 중지’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면서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만큼, 북남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것 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해 한국이 F-35 전투기 등의 배치를 중지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한 비핵화에 등을 돌리고 핵무력의 전면적인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일방적으로 F-35 전투기의 배치 중지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라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금강산관광지구를 북한이 ‘자주개발’

김정은 당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해 한국 측에 의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북한에 의한 ‘자주개발’로의 전환 의사를 표명했다.

김정은 당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고성향해안관광지구와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와 체육문화지구들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년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개발, 건설해가겠다고 했다.

한국의 현대그룹이 만든 “고성향의 부두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전형적인 우리 식 건축형식의 건축물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면서 한국 측이 만든 건조물이 철거에도 언급했다.

김정은 당 위원장은 2019년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지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은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짝 들어내도록” 지시했다. 다만, 이때에는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라는 조건부였다.

나아가 “(한국에)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해 한국의 현대그룹에게 관광개발을 맡긴姑 김정일 총비서까지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작년 12월 20일에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했지만, 이것은 당 대회에서 언급된 5년간에 걸린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제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9년 10월 시점에서는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서”였지만, 제8차 당 대회에서는 스스로 개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는 한국 측

과의 협의 없는 개발, 건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현대그룹에 의한 금강산관광의 재개나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거부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당 규약의 대남부분에 쓰인 ‘국방력의 강화’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이 개정되었지만, 북한 측의 발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고 했다.

북한에서 당 규약은 헌법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왜 ‘국방력의 강화’를 ‘조국통일의 투쟁과제’ 부분에 삽입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이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 문구는 아마도 당 규약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문맥에서 삽입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방력의 강화’가 대미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방력 강화 대상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향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미억지력으로서의 핵’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 으로

김정은 당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핵무력의 전면적인 고도화라는 방침은 북한 행정책의 커다란 변질을 의미한다.

북한은 종래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공격, 체제파괴를 억지한다는 행정책을 취해왔다.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자국의 핵 개발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당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전술핵’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국, 일본을 공격목표로 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는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며, 동족인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 줬었는데, 김정은 당 위원장의 이번 전술핵개발 지시는 북한의 핵을 ‘역지로서의 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으로의 중요한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3년 전 봄날’은 연습중지 요구에 대한 유도발언

한편, 김정은 당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수도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말을 던졌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라는 조건은 한국이 F-35 전투기 도입을 중지하거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3년 전 봄날’이라는 달콤한 말은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한국 내의 진보세력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지 등을 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감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사항’을 표명할 뿐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남은 임기 1년 반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동력은 대화와 상생협력”이라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상황 하에서 ‘비대면 방식’의 대화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4월의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합의다. 그렇지만, 김정은 당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말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비핵화’는커녕 핵무력을 더욱 전면적으로 고도화한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비핵화’를 언급은 했지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톤은 약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는 대화 재개라는 한국 측의 ‘희망사항’(바람)만을 지적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북한이 핵무력의 전면적인 고도화를 선언하고 한국을 공격대상으로 한 ‘전술핵’ 개발을 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침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유효한 대응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 ‘대화와 상생 협력’을 강조했던 것은 현실 상황에서 유리(遊離)된 인상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당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핵무력의 전면적 고도화라는 방침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완전히 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까운 시기에 올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타개해야 할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했었다. 문재인 대통

령의 신년사는 북한이 당 제8차 대회에서 보여준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남담당 비서 부재의 의미는?

제8차 당 대회 기간 중 열린 당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진 인사에서는 기존의 당 정무국이 비서국으로 개편되고 그때까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개편되었다.

남북관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대남담당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철이 당 비서로 선출되지 못하고 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은 형식적으로는 당 비서에서 당 부장으로 강등되었지만, 실제 대남사업에서는 실권을 쥐었다고 할 수 있다. 대남사업에서의 김영철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예전에 당 통일전선부장은 대남담당 비서를 겸임했지만, 왜 이번에 대남담당 비서를 공식으로 했던 것일까?

눈길을 끄는 것은 김여정의 처우다. 제8차 당 대회의 초점 중의 하나가 김여정의 처우였지만, 김여정은 당 대회 개막식 때 주석단에 앉았으며, 조선중앙TV 영상에서도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방영되어 존재감을 보여줬다. 많은 사람들은 김여정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격하지 않을까 예측했지만, 인사 결과는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지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탈락했다.

김여정이 당 정치국에서 탈락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김여정은 김정 은 위원장의 ‘아바타(분신)’이며, 그녀가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당 정치국 위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원천은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정 기간을 거쳐 당 정치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당 제1 부부장’이라는 직책도 당의 어느 부문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여정은 작년 6월 시점에서는 ‘대남·대미사업의 책임자’라고 알려졌던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김여정이 공석을 채우는 형태로 대남담당 비서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3년 전 봄날’ 재현(再現)보다 ‘올 봄의 위기’ 에의 대응을

북한이 대화노선으로 전환했던 ‘3년 전의 봄날’의 구조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표명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대로 북미접촉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외교 노력의 성과로서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북한은 ‘선남후미(先南後米)’ 정책을 통해 미국과 교섭을 하는 ‘통남통미(通南通米)’를 실현시켰다.

그러나 제8차 당 대회는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적대관계로의 전환’을 의심받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당 대회 인사를 보면 대미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어 전체적으로 봐서 대미, 대남을 포함한 외교담당자의 지위가 저하되었다. 북한은 제재와 신형코로나바이러스, 수해라는 3중고 속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자세가 현저하다. 말하자면, ‘봉남봉미(封南封米)’ 속에서 중국에 의지하면서 ‘농성(籠城, ひきこもり)’ 전술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작년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일본을 방문해 한국 정부는 올해 여름 도쿄올림픽을 무대로 한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의 재개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80%는 중지 또는 재연기에 찬성하며, 도쿄올림픽 자체가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개최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한 도쿄올림픽 재 활용은 너무나도 꿈같은 이야기다.

오히려 초점은 한미양국이 올 봄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로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이

든 정권이 시작되면 다시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을 요구할 것이다. 한일관계는 최악이기는 하지만, 북한정책을 둘러싸고 한일은 양국관계와는 별도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3년 전 봄날’의 추억이나 그 재래(再來)를 바라기보다도 ‘올 봄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한 시점에서 김정은의 직책은 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 총비서로 하지 않고 당 위원장으로 했다.

북한의 통일전략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1. 지난 7차 당 회의를 통해 드러난 통일/대남전략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시 당 중앙위 사업 총화보고에서 조국 통일 실현이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함.
 - 그 방도로서 민족자주·민족대단결·평화보장, 연방제 실현, 조국통일 3대 헌장 관철 등을 언급함으로써 기존 선대의 구상과 동일한 통일 방안 제시
- 자주적 통일을 위해 절박한 문제가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결적 자세 철폐,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 제거, △다양한 분야 및 급의 대화와 협상,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 등을 언급
 - 당시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북전단·방송 등 심리전 중단, △통일외교 및 한미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당시는 4차,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고조된 상황에서 치러진 당 대회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괄한 통일, 대남 전략을 표명한 것임.
 - 이전에는 비교적 수세적이었던 입장에서 핵무력 증강에 따른 대남 공세적인 의도도 내포

- 북한은 당 대회 후속조치 차원에서 군사당국간 회담을 제의(2016.5.21) 하는 한편, 남북 각 정당·사회·단체간 접촉과 왕래, 연대연합을 통해 화해·단합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2016.5.24)
- 또한 통일 대화합 개최 제안(6.9), 광복절 전후 연석회의 등을 제안(6.27) 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진정성없는 통일전선 공세’로 일축한 바 있으며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

2. 이번 8차 당 대회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

- 이번 8차 당대회는 기본적으로 경제분야의 전략마련에 집중되었음.
 - 정치공세나 이념적인 문제, 대남비난에 치중한 통일전략이나 통일방안의 제시보다는 국방력 강화문제, 경제위기 극복, 내부체제 결속을 위한 실천적 과제도출에 집중함.
 -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 및 당 규약 개정 등의 내용을 통해 향후 북한이 대남정책, 통일전략을 어떻게 펼쳐 나가려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 3절에서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 발전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통일문제라기 보다는 향후 대남·대미정책을 예고한 것임.
 - 대남관계에서는 “현재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발표이전으로 되돌아갔으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이 멀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이전처럼 일방적인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남측의 선의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예고
 - 그 원인으로 우리측의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는 첨단군사장비반입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본질 문제, 정치군사문제 해결 우선을 적시함.
 - 비정상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우리측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공을 우리측에 넘김.

○ 대미관계와 관련해서도 북미관계의 향방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있으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즉,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

- 미국을 최대주적으로 설정하고 핵무력 및 전략무기 지속 강화, 열병식을 통한 SLBM 공개 등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한 대외관계 확대를 언급하며 향후 공세적 외교전을 시사함.

○ 7차 때와는 달리 대남정책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통일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 과거 북한은 통일문제의 주도권 확보 및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통일방안 혹은 통일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본질문제, 근본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남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이번 당규약 개정과 관련, 개정 당규약 전문은 공개하지 않아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나 선군정치 삭제, 통일전선전술 수정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주목할 필요

○ 선군 정치와 관련해서는,

-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는데 지난 당 규약의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는 기존 선군정치를 폐기한 것으로 보임.

- 선군정치는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구호에 따라 정치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나 핵무력을 완성한 입장에 있는 김정은 시대에는 선군정치의 강조가 불필요해졌고 오히려 인민, 애민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

○ 통일전략과 관련해서는,

- 지난 당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착동을 짓부시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규정

- 그러나 8차 당 대회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당규약 서문 수정 사항을 공개

- 만약 이러한 규정에서 우리민족끼리, 남조선 인민 투쟁지지 등의 언급이 당 규약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북한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일대전환을 기하는 것이며 한 국가로의 통일보다는 정상국가화를 추진, 실질적인 2국가 체제에서 군사력 우위를 점하면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사로 분석됨.

○ 북한이 핵무력을 포함하여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재래식 군축을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의 수립이 검토되어야 함.

- 지난 당 창건 75주년과 이번 당 대회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SLBM 등 핵전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건은 계속 높아질 것이며 북한의 주장대로 ‘대북적대시정책’의 완전한 철폐 이전까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전략권 전환 등을 포함,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임.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합훈련의 지속 문제 역시 외교, 안보,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임.

별첨 1: 북한 통일방안 변천사

-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내용 등이 변화되어 옴.
- 1960년대: 남북연방제
 - 1960년 8월,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에 따른 통일이 바람직하나 당장 불가능하므로 과도기적 조치로서 연방제 통일 제의. 현재 정치제도, 내정, 외교, 군사권을 그대로 두고 남북 두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 사실상 국가연합적 성격으로 4.19 혁명 이후 남한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평화공세 차원으로 제기
- 1970년대: 고려연방제
 - 1973년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강령과 고려연방공화국 국회에 의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
 - 조국통일 5대 강령은 △군사적 대치 해소 △다방면의 교류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연방제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로 유엔가입

- 1960년대 정부대표가 포함된 최고민족위원회 대신 정당사회단체대 민족회의를 구성(남한 정부배제) 주장, 당시 우리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선건설 후통일' 논의에 따라 당장의 통일보다는 분단현실 인정을 주장(6.23 선언), 북한은 2개의 조선 책동으로 비난하는 등 1970년대는 북한이 다소 공세적인 태도로 통일방안을 주도

○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1980년 제6차 당 대회시 김일성은 기존 연방제를 구체화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함. 이 방안에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국가의 구성과 운영원칙, 10대 시정방침 세부분으로 구성
 - ① 선결조건: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군사파쇼정권교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
 - ② 연방국가 구성: 남·북·해외동수의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실행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통한 지역정부 지도, 대외 중립국가
 - ③ 10대 시정방침: 경제 등 다방면 교류, 교통·통신 연결, 민족연합군 조직 등
- 기존 과도기적 연방제가 아닌 완성형 연방국가를 주장, 지방정부 개념이 없어지고 연방상설위원회가 직접 지역정부 관할(정치, 외교, 군사권 포함). 남한 정권퇴진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선결조건을 주장함으로써 통일전선전술 의도를 드러냄.

○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주장

- 1990년대초 동구권 붕괴 등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등 체제유지의 불안을 느끼면서 공세적인 통일방안에서 수세적인 태도로 변화
-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 실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 정부에 잠정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 나갈 것을 주장 → 느슨한 연방제

- 또한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채택(1993)하여 사상과 이념 존중, 외세침략 배격, 접촉의 장애물 제거 등을 주장하였는 바 이 역시 흡수통일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 제시된 방편

○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2000.10)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기능과 권한을 그 대로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어오는 방법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다시 과도기적 단계를 인정
- 김정일 시대에는 6.15 공동선언 2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일방안과 관련된 논의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

별첨 2: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제조건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통일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3단계) ※ 민족사회 건설 우선 (민족통일 → 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 국가체제 존립 우선 (국가통일 → 민족통일)
과도통일 체제	남북연합 -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 장을 채택, 남북연합기구 구성운영 ※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 → 국민투표로 확정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통일정부, 통일국회(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 통일부, 『2019 통일문제 이해』 p.141.

북한 제8차 당 대회(대남) 분석 토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경시 혹은 무시(?) 태도 견지

-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남북 및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특히 2019년 12월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애(求愛)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
 - 2020년에 들어와 3.1절과 광복절 기념사, 유엔총회연설(9.22.) 등을 통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했으며, 남북 간의 소통채널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통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무력화하는 등 강경정책으로 일관함.
 - 2020년 6월 17일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 있는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와 6.15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를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이라면서 남북관계 파탄은 한국 정부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라고 비판했던 것이 비록 북한 인민들에 대한 내부 교육적 성격이 강했다고 하지만, 한국정부의 대응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무시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할 수 있음.
-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때와 달리 제한적인 내용의 선별적인 보도에 그쳐 북한의 의도와 그 의미 분석에 한계
 - 2016년 제7차 대회 개회사(5.6.)에서 “조국의 통일과 부국강병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으나 2021년 제8차 대회 개최사(1.5.)에서조차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는 데 그침.

- 또한, 2016년에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5.7.) 전문을 공개하고 약 12%가 ‘통일문제’(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에 할애됐던 데 비해 제8차 대회에서는 사업총화보고의 일부만을 공개하는 데 그쳤으며, 사업총화보고에서도 통일문제를 대외문제와 함께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보다 대외문제에 중점이 놓여 있어 남북관계를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하려는 인상을 받음.

-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이틀 동안의 토론(8일 8명, 9일 12명)을 보면(공개된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낮으며, 비관적으로 표현하면 남과 북은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말하자면 이혼을 이미 결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임.

* 2016년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토론에서 김기남은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변영과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이 바로 우리 대에 빛나게 성취될 수 있다는 크나큰 신심에 넘쳐있다”고 말했으며, 김영철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민족대단결5대방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통일강국을 위해 투쟁’하자고 강조함.

- 총비서 추대사(1.10, 리일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지략과 대외활동에 의해 “세계정치 흐름을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주도”했으며, “비범특출한 령도력으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정치와 경제, 군사,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해 “군사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조국의 안녕과 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해주신” 업적을 칭찬하고 있지만,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2018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2월 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가적 초특급방역조치들의 엄격한 실시’를 최우선하는 가운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해석과 제안에 대해 북한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신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 문제’에 집착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라고 밝히면서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남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당분간 남북대화나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국가경제의 성장목표와 인민생활의 향상의 장애가 되었던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과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와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 등의 ‘개관적 요인’에 더해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한국 정국을 고려하면,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2020. 6.13.)를 연상시킴.

■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조국통일 과업과의 결별인가?

- 북한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김정은’ 독자 체제 과시
 - 제7차 당 대회와 달리 1월 5일 개막한 제8차 대회 주석단과 연단 뒤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아 김정은(중국식으로 말하면 제3세대 지도자) 독자 체제 출범을 내외에 과시하려함.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전하는 보도 내용을 보면, 김일성-김정일이 제시하고 정립한 통일방안이나 방침 등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이는 선대가 중시했던 ‘통일’보다 명실상부한 김정은 독자 체제가 국가로서의 ‘북한’의 발전을 최우선해나가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것도 아님.

○ 조국통일 과업 관련 당 규약 개정을 통한 조국통일 과업과의 점진적인 결별(?)

-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당 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것,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는데, 낡고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통일관련 내용이 당 규약 전문에서 삭제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5월 개정 당 규약 전문에 있는 통일관련 부분: 조선로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개정 당 규약 서문(1월 9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는 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이라고 지적했는데, 개정 전 규약과 비교해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지가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매우 자의적이며 남북 간 혹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남북 모두 통일보다는 공존, 나아가 남북관계를 보통 국가 간 관계로 인식

- 2020년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며”,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

각도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 당 대회에서 북한의 통일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 측의 선택적인 보도만으로는 단언해서 말할 수 없으나 한국의 진보정권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임(2016년 대회에서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라고 비판).

- * 2016년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규정했으며, 김정일이 조국통일3대현장(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민족대단결5대방침 등에 입각해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었다면서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임.

- * 또한, 2016년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는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 미중, 미일 및 중일 등 역내 주요 국가 간 관계에 더해 대북정책이나 통일문제를 둘러싼 한국 국내의 남남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

북한 제8차 당 대회(대남) 분석 토론

이정철 (승실대 교수)

1. 대남 정책 형식

- 대남 정책 형식도 7차 대회 시기는 3, 4장으로 나누어 나왔으나 이번에는 3장 하나로 합해져 다루어짐.
 - 8차 대회 총화 보고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 발전을 위하여”로 합쳐져 제시됨.
 - 7차 대회 총화 보고는 “3.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와 “4.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로 나누어 제시

2. 통일 관련 규약 개정

- 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 고 하여 국방력 강화를 조국통일과 연결
 - 전날 총화보고 당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하였다는 전제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고 수정 서문의 전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구 규약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구절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변환시키거나 남조선 해방론이나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 등을 수정한 것이라면 유화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음.
- 국방력을 통한 ‘평화적 안정’ 론을 두 개 조선론으로 인정하는 해석도 제기되지만,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강조하는 중통의 결

정서 해설에 주목해야 함.

- 국방력과 근원적 위협 운운을 7차 당 대회 당시 조국통일의 ‘비평화적 방법’을 언급한 내용과 연결된 부분일 수도 있음.
- 중앙군사위 소집의 성원 조건을 없앤 것에서나 preemptive strike를 의식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나 비평화적 방법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언급한 것으로 보임.

구 규약 관련 부분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 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

3. 조건부 대남정책

- 남북관계에는 두가지 근본문제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조건으로 남북관계에 임하겠다고 표명
 -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 *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명성 성명 요구
 - *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수 있는 수위의 표현들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
 - 반공화적 모략 소동 중단

* “비정상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하라고 하여 법제화와 엄정 집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 군사문제 등 근본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논의(인도적 지원, 보건협력 등)부터 시작하자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거부하는 입장을 재확인

- 근본문제를 강조한 것이지 교류 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것은 과도한 해석

○ 현 상황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새 출발점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기는 형태임.

- 동 파트에 진의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지가 관건이고 앞의 두가지 조건을 한국 정부가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또한 조건일 것임.

4. 결론

○ 현재로서는 당 대회 기조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톤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국내 문제에 대한 검열과 계획화 회귀 조짐 등은 이같은 우려를 심화시키는 부분임.

- 대남, 대미 관계는 조건부 협상론의 태도이면서도 원칙론으로는 무력 억지 태세의 강화라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임.

○ 그러나 대남 노선에서 제기한 조건이 생각보다는 문턱이 높지 않으나, 규약 변화의 내용에 비추어 유화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는 등 이중적임.

-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나 군사훈련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부분일 것임.

- 대남 강경 자세를 견지 해 온 김여정이 후퇴하고 김영철이 통전부장으로 복귀, 리선권이 대표 연설을 한 것은 실세 통전부의 복귀라는 점에서 향후 태도를 살펴볼 점이 있음.

○ 결론적으로 조건부로 제시된 북한의 대남, 대미 노선은 3월 전후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됨.

Session 2

제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 평가 및 전망

경제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특징과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과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열 (한양대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 평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문제 제기

-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1.5.-1.12, 8일)가 노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고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
 - 현재 김정은 당 총비서에게 직면한 최대난제는 경제난이고, 또한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는 길이 인민생활향상이기 때문에 경제문제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김정은 총비서는 제8차 당대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 첫 날(1.5) “새로운 5개년계획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한계단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
 - 또한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확실한 진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¹
 -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기본전선으로 경제전선을 언급²함으로써 이번 당대회에서의 방침이 경제건설에 찍혀 있음을 재확인
 - 김정은 총비서는 폐회사(1.8)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전도가 좌우된다”고 강조³
- 김정은 총비서는 경제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적폐들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1.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노동신문』, 2021년 1월 8일.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부문별협의회 진행,” 『노동신문』, 2021년 1월 12일.

- 그는 당 대회 개회사(1.5)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고 지적
- 그러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한다”고 언급
- 이에 따라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목표와 과제 달성을 위해 향후 강도 높은 혁신과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이 글에서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경제건설구상과 실행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새로운 경제건설구상

■ 새로운 경제건설 전략: 정비전략, 보강전략

- 현단계에서의 경제전략으로 정비전략, 보강전략 제시
 -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경제사업체제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
- 이를 위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
 - 총적 방향: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 중심 과업: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폐회사,” 『노동신문』, 2021년 1월 13일.

=> 금속, 화학공업, 농업, 경공업 발전이 핵심 과제

- 목표: 국가경제의 현황과 잠재력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으로 나아가는 것
- 세부 과제: 1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1전력생산 늘리기 1교통운수(철도현대화, 평양지하철도 기술개선, 화물선 만들기, 새 지하전동차 생산) 1건설부문(살림집 건설)·건설공업부문 1이동통신기술 발전 1관광사업(금강산지구 현대화) 1지방경제 발전 1생태환경보호사업 1농업·경공업·수산 1국가방위력 강화 1첨단과학기술 개발 촉진 1방역기반 강화 등을 설정
-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과거의 성과와 결함을 전면적·입체적·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결산해 마련했다고 주장

구분	주요 내용
경제전략	■ 정비전략, 보강전략
목적	■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
총적방향	■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
중심 과업 (중심고리)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 ■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 ■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리는 것
목표	■ 국가경제의 현황과 잠재력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으로 나아가는 것
전제	■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 ■ 국가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 ■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 ■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진 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 ■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 데로 지향
요구 반영 사항	■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
기본 종자	■ 자력갱생, 자급자족 -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

■ 자력갱생/자급자족 기초 유지

-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총화보고를 통해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새 경제발전 계획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히며 사실상 앞으로도 '정면 돌파전' 기초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
 -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면서 보다 국가적인, 보다 계획적인, 보다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
 - 이어 “새 5개년 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부연
 - => 즉 5개년 계획의 성격을 현실성, 자립성, 인민성으로 규정

■ 인민생활 향상, 의식주 문제해결에 방점

-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해결에서 기어이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천명
 - 이를 위해 농업, 수산업, 소비품 생산증대, 살림집 건설, 지방경제발전 강조
- 새 경제계획은 농업 분야 발전과 소비품 생산 증대 등 인민 생활 향상에 방점
 - 김 총비서는“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총적 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규정
 - 이에 따라 새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

- 화하며 농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설정
- 경공업부문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소비품생산을 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 도모
 -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대주는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경제기술적 대책을 수립
- 또한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 것"을 언급
- 농업과 함께 수산부문을 인민 식생활과 직결된 3대 부문으로 규정하고, 경공업 발전을 주문
 - 특히 농업생산을 강조. 국가적인 투자를 늘여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 앞으로 2~3년 동안에 해마다 국가의무 수매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식량공급을 정상화할 것을 지시
 - "자립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것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기했다"라며 "기본과업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라고 언급

■ 지방경제 발전에 집중

-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지방경제를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 군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을 돌리겠다고 약속

- 국가적으로 해마다 모든 시, 군들에 시멘트 1만 t씩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
-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시, 군이 자체의 경제적 토대를 원만히 갖추 수 있도록,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혜조치도 제공

■ 관광특구개발 지속

- 김 총비서는 중심과업의 하나로서 '관광부문'에서의 발전을 제시
 - 구체적으로 금강산지구를 거명하면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며 자체적인 개발 의지를 재천명
 - 김 총비서는 "고성향 부두에 있는 해금강 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전형적인 우리 식 건축형식의 건물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
 - 또한 "금강산 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에 따라 고성향 해안관광지구와 비로봉 등산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와 체육문화지구들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
 - * 당초 북한은 김 총비서가 2019년 10월 '남측과의 협의 하'에 시설물 철거할 것을 지시한 이후 우리 정부와 문서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하지만 이날 김 총비서가 새 5개년 계획에서 금강산지구의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독자개발 방침을 확정

3. 실행 전략

■ 변화와 혁신 그리고 주체적 역량 강화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객관적 장애 요인 분석에 토대를 둔 변화와 혁신 추구

- 우선 객관적 조건들로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 책동의 후과,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와 ▲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
 - 이에 따라 5개년 전략에서 주요 경제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예견하였던 국가적 투자들과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자평
 - 주관적 장애요인들로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푹푹히 세워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
- 이에 따라 북한은 객관적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주관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과학기술이 실제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현재의 위기돌파 방안으로 자체의 힘과 주체적 역량 강화를 제시
-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는 주장

■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

- 김 총비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은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산업에 대한 내각 책임제·내각 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언급

- 내각의 역할로는 △국가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全一性) 강화 사업 추진 △경제관리의 결정적 개선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 정상화·개선 현대화·원자재 국산화 추동 △자립경제 토대·잠재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활동 지향 등이 언급
-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
-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을 확대시키는 견지에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경제조직과 지휘를 강화⁴

■ 경제관리개선

-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성패는 경제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규정
 - 중앙당 경제부서들과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합심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시범적으로 연구도입되고 있는 방법들과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들을 결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면서도 최량화, 최적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들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⁵
- 경제관리개선은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에 초점
 -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국가경제는 자립경제이고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 규정

4.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김정은) 결론,” 『노동신문』, 2021년 1월 13일.

5. 위 기사.

-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높이고 경제사업의 결과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원칙에서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
- 경제관리개선의 기본으로 원가저하와 질제고를 제시
-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근본요구, 근본방향에 입각하여 경제를 정비하고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강화하며 국가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올바르게 전개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
-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며 경제부문들의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고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절실한 부문들을 보강
-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들을 올바르게 이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

■ 과학기술발전 촉진

- 김 총비서의 총화보고는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으로 규정
-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며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당적, 국가적, 행정적 지도와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연구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추진할 것을 강조

4. 평가와 전망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기존 계획들을 정비보강하는데 초점

- 기존 노선과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미진한 부문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을 제시
 - 정비전략 또는 보강전략은 통상적으로 중장기적 경제계획이 실패했을 경우 일정 기간의 완충기를 통해 경제 계획을 정비하거나 보강할 때는 쓰는 용어
 - 기존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제7차 당대회 결정), 정면돌파전략(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정비, 보강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과시
 - 경제관련 노선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보다 지금의 기조를 강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
 - 이번에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제7차 당대회에서 밝힌 경제강국건설 전략노선과 주요 과제, 당면과제로서 제기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비해 구체성과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오히려 축소, 후퇴한 느낌

- 내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자립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내각중심제/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리시스템(사업체제, 기구체제)의 정비 지속
 - 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당과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쇄신, 내각의 집행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
- 금속, 화학, 농업, 경공업의 선도적 발전의 지속적 추구
 - 북한은 지난해 농업, 전력과 더불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강조⁶한 바 있는데, 이번 당대회 총화보고에서도 이 부문들에서의 성과 도출을 강조
-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5개년계획에는 단기간 내 대북제재 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목표 제시
 - 즉 대규모 관광특구 조성⁷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외 무역, 합영합작 등과 관련한 새로운 대외경제정책들이 제시되지 않았고, 다만 금강산 관광 독자적 개발계획만 언급
- 경제발전 청사진으로서 10대 ‘중장기’ 전망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주목
 -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회의에서 10대 전망목표 제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중장기 전망목표 설정과 이의 실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

6. “화학공업부문이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자.” 『민주조선』, 2020년 6월 30일.

■ 자립경제 기반 강화에 총력 집중

- 김정은 총비서는 총화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언급
 - 수입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대목도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북중무역이 사실상 단절된 현재 상황을 자립 경제구조 정착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파악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기술로 안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경과 공중, 해상 봉쇄가 지속되는 현재의 위기를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과학기술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⁷
- 따라서 자립경제건설 노선과 이의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는 연료, 원료, 설비를 중심으로 한 국산화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
 - 자체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연료, 원료, 설비, 자재 등의 국산화를 통해 에너지(전력), 금속, 기계, 화학공업, 농업 발전에 집중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
- 국산화와 함께 생산과정에 나오는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사업,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 추진
 - 즉 제재와 감염병이 지속될 경우 북중무역을 통해서도 수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전 동력을 모색하는 노력을 가속화
 - 특히 인민들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사회주의상업을 복원하고 금속, 화학분야 중간재 등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제조업 회복에 나설 전망

7. "논설, 80일전투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개척자, 전초병," 『노동신문』, 2020년 10월 27일.

- 북한은 과학기술 중심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분야에서의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더욱 촉진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상품, 즉 국산제품의 등장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
- 국산제품 증산은 해외 수출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 수요를 겨냥. 북한은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더욱 매진 가능성

■ 경제 분권 확대보다 국가 통제 강화에 방점

-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서, 이 제도는 경제분권화의 상징이지만 실제 당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분권보다는 국가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
- 김 총비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강화하자면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높이고,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
- 민간 분야 상업과 관련해서도 "현 시기 우리 상업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는 상업봉사 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시
-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 '생산물의 통일적 관리', '국가의 조절 통제력 회복 등과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경제분권화 조치를 확대하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강화로 풀이
- 따라서 당 대회 이후 기업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4일 기업소법을 개정(수정보충)해 절약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업소의

- 노동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절약 압박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 확립'과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 강화',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등 "국가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조해 시장보다는 국가 통제에 무게
- 이에 따라 경제분야 당정책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행정, 경제관료의 전진 배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가 지속될 전망

■ 코로나-19 변수가 여전히 대외적 장애요인으로 작용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코로나19를 확실히 통제하고, 북중교역이 조기에 재개, 정상화되는 것이 관건
- 코로나19 방역대응 차원의 국경봉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이 완화되지 않는 한 대외 교역의 대폭 축소->인적교류 중단 -> 중간재 수입 감소에 따른 제조업 생산 축소 ->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소비 감소로 인한 시장활력 추락 -> 외화 및 재정난 심화 등의 악순환 지속 불가피
-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종식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역 전투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건설 목표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역보건인프라 구축을 언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인민의 생명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보건위기 대응 및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 모색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8.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20년 11월 4일 금연법과 기업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평양종합병원 준공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료보건 시설 및 관련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면서 전국 단위에서 산과 강하천을 정리해 홍수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치산치수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주목되는 것은 관광특구 조성사업인데, 코로나19의 지속 여부에 따라 개발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세계적 차원에서 뚜렷한 완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관광특구 개발 박차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
- 북미 관계가 불투명할수록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북한경제회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
 - 올해 북한 경제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북중 무역 및 관광협력의 재개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다만 수입병 배척 등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방향과 현실적으로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가 심화될 전망

■ 안정적 재정확충이 새로운 경제건설 성패 관건

- 8차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당사업과 당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확보가 큰 과제로 부상
- 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인민생활 향상과제와 연계해 주목할 필요
 - 김정은 총비서가 당총화보고에서 제시한 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 국방건설 등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인 과제

-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수출,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외화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 재정확보를 어떻게 해나갈지 주목
- 당재정 확충에 이어 이번 달 안에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예산 수입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전망

■ 국방력 강화 방침에 따른 경제발전계획 차질 가능성

○ 이번 당대회에서는 핵 무력의 증강 방침은 더욱 확고하게 제시

-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고,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 탄두 안에 여러 개의 다른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개발, 신형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영 등 거침 없는 핵 무력 증강계획을 공개
- 과거 경제·핵건설 병진노선처럼 국방부문에 대한 과도한 자원 투입은 민수부문의 공급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발전계획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
- 또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할 경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은 국방건설 집중으로 북한의 경제건설 역량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
- 북한이 계속해서 전략무기, 신형첨단무기 개발 등에 집중할 경우 이번에 새롭게 수립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에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특징과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1.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¹

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년)에 대한 평가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하 5개년전략)의 목표 미달에 대한 인정, 오히려 강조
 - “5개년전략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음.
- 5개년전략의 목표 미달의 객관적/주관적 요인 분석
 - 그런데 객관적 요인 못지않게 주관적 요인을 강조
 -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 열쇠는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의 강화에 있음.
 -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강조
 -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와 걸림돌로 될 결함들을 인정하고 그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함.
- 객관적 요인: 이른바 3중고
 - 대북제재(“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 책동의 후과”)
 - 코로나 19(“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

1. 지난 1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행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 1월 5일부터 7일까지 김 위원장이 행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 1월 12일에 행한 김 위원장의 당대회 결론에 대한 노동신문 보도내용을 토대로 함. 『로동신문』, 2021.1.6., 1.8., 1.13.

- 수해(“해마다 들이닥친 흑심한 자연재해”)

* 이들 요인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음.

○ 주관적 요인

-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의 만연, 구태의연한 사업 방식

- 낡은 사업체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 등

* 이들 요인 때문에 △5개년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고, △과학기술이 실제 나라의 경제 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

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의 요지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의 핵심

-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

- 5개년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

○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전략의 목적

-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

○ 5개년계획의 전반적 방향

-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

○ 5개년계획의 목표

-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으로 나아가는 것

○ 5개년계획의 전제

-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
-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
-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 데로 지향시키는 것

○ 5개년계획의 요구

-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

○ 5개년계획기간 자력갱생의 발전방향

-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함.

다. 5개년계획의 부문별 주요 내용²

(1) 기간공업

○ 금속공업부문

- 주체철 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재생산을 증대

○ 화학공업부문

- 자체의 기술역량 강화, 국가의 화학공업구조 개선, 화학제품생산 증대
- 국가의 화학공업구조를 스스로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

○ 전력공업부문

- 전력증산투쟁 전개, 생산토대의 정비보강 및 확대
-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조수력 발전소 건설, 핵동력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

○ 석탄공업부문

- 석탄공업부문에 설비와 자재, 노동력과 자금을 집중적 보장
- 탐사와 굴진의 선행을 통해 채탄장 확보 증대, 유연탄공업 발전, 탄부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개선 등

○ 기계공업부문

-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 전환

2.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때의 보고순서에 따라 부문별 주요 내용을 정리.

- 공작기계, 운전기계, 건설기계, 전기기계 등 현대적이며 효율성 높은 기계제품 적극 개발생산

(2) 교통운수, 건설, 건재, 체신, 상업

○ 교통운수부문

- 철도현대화를 적극 추진, 철길 안정성 보장 및 증량화, 표준철길구간 확대, 철길 개건, 평양지하철도의 기술개건과 역현대화공사 등

○ 건설부문

-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
-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 5,000세대 살림집 건설

○ 건재공업부문

- 800만 톤 시멘트 고지 점령, 마감자재의 자급자족 실현, 시멘트공장 신규건설 등
- 각 도(道)는 자기 지방의 원료에 의거하는 여러 건재생산기지 건설

○ 체신부문, 상업부문

- 체신부문에서는 통신하부구조의 기술갱신, 이동통신기술 발전을 통해 다음세대 통신으로 이행
- 상업부문에서는 국영상업의 발전, 급양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살림.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고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살림.

(3)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 도시경영, 대외경제, 관광

○ 대외경제부문

- 대외경제사업의 실태와 나라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외경제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방향적 문제들이 제기

○ 관광부문

- 관광사업 활성화
-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재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함.

(4) 경제관리 개선

○ 국가경제의 자립성, 계획성, 인민성의 강화

- 이를 위해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고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

○ 원가저하와 질 제고를 경제관리개선의 기본으로 해야 함.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강화하며 국가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올바르게 전개

- 아울러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

○ 전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

- 또한 경제부문들의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고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절실한 부문들을 보강
-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들을 옹계 이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

(5) 농수산업, 경공업, 시·군 발전, 과학기술

○ 농업부문

- 농업생산 증대, 특히 당이 이미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
-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등
- 식량의 자급자족
- 향후 2~3년간 해마다 국가의무수매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림

○ 경공업부문

-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가 핵심 과제
- 현대화 추진, 또한 약한 부분과 공정들은 보강하고 없는 부분과 공정들은 갖추면서 부단히 살을 붙임.
-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신제품 개발에 노력

○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

- 시, 군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진지를 다지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추진
- 지방경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해 발전

○ 과학기술

-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으로 규정
-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며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당적, 국가적, 행정적지도와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연구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

2.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분위기

- 5개년계획을 포함해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아 수세적인 정책기조와 침체된 분위기가 두드러짐.
 - 성장보다는 안정을 강조하는 차분한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표면적으로는 역량축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버티기를 주장하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 가까움.
- 지난 2016년 5개년전략 발표 당시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임.
 - 사실 현재의 경제여건 및 대외적 여건은 2016년의 경제여건 및 대외적 여건보다 훨씬 나쁜 상태
 - 2016년 5개년전략 때는 경제강국건설,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여러 차례 주장했고, 더욱이 경제강국건설의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강조. 하지만 올해 5개년계획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음.
- 이와 관련, 북한은 △과거 5개년전략의 교훈 △현재의 매우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인해 이번의 5개년계획에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시해서 각 분야의 목표치를 종전보다 크게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임.

- 5개년전략 당시는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의 목표 설정
- 그런데 이번의 당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5개년전략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인정
- 특히 대외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북 경제제재는 현재와 변함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즉 제재를 상수로 놓고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의 계획은 일종의 최소 목표치 계획으로 평가가능
- 달리 보면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수세적 정책기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경제분야의 수세적 정책기조와 위축된 분위기는 군사분야의 공세적 정책기조와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와 완전히 대조적
- 많은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이 종전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사실상 회귀했다고 평가
- 다만 필자는 북한의 전반적인 국가전략이 ‘경제를 댕가로 치를 지도 모를 군사력 강화’ 혹은 ‘경제를 희생으로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군사력 증강’으로 후퇴했다고 평가

나. 비전과 전략에 대한 평가

-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음.
-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현재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경제분야의 목표(목적)은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

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임.

- 달리 보면 대외적 여건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자급자족)로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

○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음.

- “5개년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는 큰 방향 제시에서도, 부문별 과제 제시에서도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또한 새롭게 제기된 방안은 나오지 않았음.

- 후술하겠지만 북한의 여건에서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

○ 또한 5개년전략의 목표 미달의 주관적 요인을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의 만연, 구태의연한 사업방식, 낡은 사업체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이라 규정하고, 이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음.

- 사실 경제분야 목표 미달의 원인을 사상, 태도 등과 같은 곳에서 찾는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함.

○ 5개년계획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목표 달성을 내세울 수 있는 분야로 건설을 적시한 것만으로 북한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음.

- 이번의 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총 3건인데 이 중 주택이 2건, 건재(시멘트)가 1건으로서 모두가 건설과 관련된 분야임.

- 건설분야는 그 특성상 제재와 코로나(국경봉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분야이고, 또한 민간(돈주)자금 동원도 용이해 당국의 재정적 부담도 적으며, 아울러 미약하지만 일종의 경기부양 효과도 존재
- 주민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발표 내용을 보고 크게 실망했을 것으로 보임.
 - 지난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이것이 주민들의 불만 및 동요로 이어질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컸고, 이것이 당대회 조기 개최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는 해석이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
- 이런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응을 모를 리가 없는 북한정부가 그럼 왜 당 대회를 개최했고,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는 의문이 제기 가능
 -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당 대회와 5개년계획의 주기적 개최, 일종의 제도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 가능

다. 경제정책의 주안점

- 이번의 5개년계획은 과거의 장기경제계획과는 달리, 경제성장 자체를 경제운영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음.
 - 물론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문별 목표 수치는 있음.
 - 하지만 그 목표치는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종전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임.
- 크게 보면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경제의 질적 개선에 무게를 두었음.
 -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생존에 무게를 두었음.
 - 전반적인 경제운영방향은 경제운영의 정상화 혹은 경제체질 개선

-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라는 표현을 음미해볼 필요는 있음.
 - 이는 향후 경제운영의 대외여건이 지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한 데 원인이 있기도 함.
 -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본격화된 고강도 대북제재에 다 작년부터의 코로나-19(이로 인한 사실상의 국경봉쇄)여파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크게 훼손되고 산업연관도 심각하게 파괴된 현재의 경제적 조건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비, 보강의 방향성, 지향점은 북한이 밝혔듯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인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이번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를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 표현은 지난 2019년 연말의 전원회의 때도 등장했지만 이번에 보다 강화되는 분위기
 - 2016년 5개년전략 때도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는 아니었음.

- 그런데 이번 5개년계획의 목표, 지향점은 자력갱생 못지않게 자급자족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 인상
 -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새로운 5개년계획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며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 데로 지향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 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
- “사업총화보고에 상정된 기간공업의 부문별 발전방향은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
-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 “경공업부문에서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 돌이켜 보면 김정은 시대는 △시장화의 진전, △북중무역 확대, △대중 중간재·자본재 수입 확대 및 시장화 진전을 배경으로 한 국영 제조업의 부분적 회복의 3대 동력이 일종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면서 경제의 상대적 회복을 견인³

- 하지만 이른바 3중고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3대 동력 및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추락
-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경제를 종전보다 더 강하게 갈구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음.

○ 따라서 종전보다 더 강하게 자급자족적 경제를 지향하면서 이의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는 경제의 세계에 정치의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3. 물론 상대적 회복 시기에도 산업연관복원 및 경제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소재분야(금속, 화학)의 회복이 더디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입의존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존재했음.

- 실제로 주체의 철, 주체의 화학공업은 김일성 시대부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임.
-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의 특성이 상대적 실리주의, 상대적 합리주의였는데 이런 특성이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5개년계획은 퇴행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함.

라. 경제개혁의 후퇴 여부

- 일각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특징으로서 ‘시장의 억제와 국가통제의 강화’, ‘경제개혁의 후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심지어는 계획경제의 부활시도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음.
 - 이들은 그런 평가의 근거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 “국가적인 일원화 통제체계 강화”,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 관리”,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의 회복”, “우리 국가경제는 자립경제이며 계획경제” 등의 주장이 제기된 점을 지적했음.
 - 아울러 이번 당 대회가 개최되기 전인 지난해 8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내년의 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시점부터, 제7차 당 대회 때와 같은 5개년 전략이 아니라 5개년계획이라고 표현한데 주목하면서 7차 당 대회 때와 같은 개혁사회주의 기조는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제시된 바 있음.
-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님.
 - 다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우선, 국가통제 강화의 요소가 있으며, 나아가 개혁과 충돌하는 정책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국민경제의 자원에 대해 중앙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
 - 앞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단적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 제7차 당 대회 당시에는 ‘5개년전략’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바른 실시를 역설
 - 그런데 이번에는 ‘5개년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음.
 - 특히 지난 2019년 헌법개정에서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제’를 대체했으며, 지난해 공식매체를 통해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의 올바른 실시를 주장했던 북한이 올해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언급조차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
- 아울러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공식적·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개혁적 성향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음은 충분히 감지됨.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아 5개년계획에 나타난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시장 억제 정책으로의 선회, 나아가 개혁의 후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님.
- 무엇보다도 경제관리의 개선이 여전히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시범적으로 연구도입되고 있는 방법들과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잘 하고있는 단위들의 경험들을 결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면서도 최량화, 최적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들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에

서 잘 나타나듯이 북한식 경제개혁의 실험·시행의 지속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음.

○ 아울러 “5개년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이라는 데 잘 드러남.

- 북한의 자력갱생은 크게 보아 대외적 차원과 대내적 차원이 있음. 전자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타국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북한 내에서 지방, 기관, 기업, 개인 등 개별경제주체들이 국가(중앙)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임.

- 특히 이는 종전에 국가(중앙)이 지방, 기관, 기업, 개인 등 개별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해주던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들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음.

-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경제난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경제난 이후 강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고강도 대북제재 등으로 물자부족,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더욱이 지방(도, 시·군) 및 기업에 대해서는 식량, 생필품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

-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경제의 시장화는 확산될 것이며, 이런 경향을 북한정부가 모를 리가 없음.

○ 이와 관련, 이번의 5개년계획에서는 ‘시·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지난 5개년전략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

- 특히 시·군 당위원회, 인민위원회들이 “자기 지역 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

- 이는 결국 각 시·군의 인민생활에 대한 국가(중앙)의 책임을 각 시·군에 전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각 시·군은 이 문제를 중앙의 도움 없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북한정부가 ‘시·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강조하면 할수록 각 시·군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및 각 시·군내 개별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 관련 활동이 지속 확산될 것이고, 이런 경향을 북한정부가 모를 리가 없음.
- 또한 ‘계획’이라고 해도 과거 경제난 이전의 ‘계획’과는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름에 유의할 필요
- 우선, 종전의 계획은 중앙이 모든 물자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주는,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균형을 맞추어주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중앙이 일부 물자(특히 핵심적 물자, 전략 물자)에 대해서만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주는 계획에 불과함. 나머지 물자의 수요공급은 민간을 포함한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사실상 맡기는 방식임.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혁 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소지표, 농장지표라는 이름 하에 기업이 중앙의 물적·재정적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활용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계획에 포함시켰음. 즉 시장을 계획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편입시켰음.
 -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계획’이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내용적으로 ‘시장’을 포함하고 있음.

5. 유동적 · 과도기적 성격

- 이번의 5개년계획은 경제난 발생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장기경제계획(통상 5~7년 단위)보다는 오히려 장기경제계획기 사이의 ‘완충기’를 연상시키는 측면도 존재
 - 예컨대 5개년계획(1956~59)과 1차 7개년계획(1961~70) 사이의 1960년, 6개년계획(1971~76)과 2차 7개년계획(1978~84)사이의 1977년, 2차 7개년계획(1978~84)과 3차 7개년계획(1987~93)사이의 1985~86년 등
- 완충기란 북한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사회주의 건설에서 경제발전의 한 단계의 과업이 끝났을 때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을 보충, 정비, 재편성하는 준비시기”⁴로 되어 있음.
 - 이는 북한에서 장기 경제계획의 핵심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때로는 목표달성기한의 앞당기기(즉 목표의 조기달성)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부문별 불균형, 특히 특정 분야의 긴장성 또는 뒤처짐을, 계획 종료 이후의 기간에 새로운 자원 투입 등을 통해 보완해서 경제 전반의 균형을 확보하는 과정
- 어떻게 보면 현재 제시한 5개년계획은 고정불변이라기보다는 다소 유동적이며, 나아가 과도기적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계획을 과연 5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시
 - 외부여건이 호전되면 기존 계획을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제시할 가능성을 자신들 스스로 열어 두었을 가능성

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725.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과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8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

가. 지난 5개년 실적

■ 전반적 평가: 목표 대비 “모든 부문에서 엄청 미달”

○ 이는 ‘대북제재, 자연재해 및 보건 위기’ 등의 ① 객관적 요인과 함께 ‘경제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② 주관적 요인을 지적

- [객관적 요인] 미국과 적대세력의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의 후과와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 그리고 “세계적인 보건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주요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부진
- [주관적 요인] 5개년전략 부진 원인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과학적 계획수립 실패, 과학기술의 경제사업 견인 실패, 불합리한 경제사업체제로 분석 평가

■ 부문별 실적 평가: 농업, 건설, 산림 부문 등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금속 및 화학 등 여타 부문에서는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실적이 없고 애매하게 서술. 심지어 과학기술의 경우 신랄하게 평가

나. 향후 5개년 계획

■ 중점 목표: ① 완충(정비, 보강, 균형 등) 및 ②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둔 자력갱생의 토대 강화

○ [완충]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경제사업체제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 추진,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

- 경제적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력의 합리적 재배치, 경제부문의 취약점 발굴, 균형적발전이 필요한 부문의 보강 추진”

○ [선택과 집중]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은 중심과업을 제시

■ **중심과업: ① 금속 및 화학공업 우선 투자를 통한 생산 정상화와 ②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소비품 증산**

○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을 늘이는 것”

■ **추진 방식: ① 자립경제 강화, ② 내각책임제 강화, ③ 현실적 계획 수립**

○ [자립경제]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임을 강조하고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는 한편, 대외경제활동은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

○ [내각책임제] 내각은 경제사령부로서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 일례로, 원가절감과 질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고, ②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를 강화하며, ③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 개선 추진 등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및 일원화 통계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음

- [현실적 계획수립]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립

■ **부문별 과제: 금속 및 화학공업 우선 투자 원칙 하에 주민들의 식의주문제 해결에 주력**

- 기간공업: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언급(‘당내본’에서 상세히 언급했을 것으로 판단), 단 전력 부문에서 “핵동력공업의 창설”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새로움

- 식의주 관련(농축수산, 경공업, 건설 등)

- “인민들의 식의주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7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농업, 경공업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경공업(재자원화 강조), 건설(시멘트 증산 및 신규 살림집 건설 확대), 운수(대중교통수단 확충), 환경(공원/유원지 조성) 등이 새로 제시되는 데 불과

- 상업: 국가상업망 확충을 통해,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관광: 금강산 관광을 북한 내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 식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 북한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변모되는 국가의 모습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기존 해금강 호텔 등의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북한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북한 식 건물들을 지을 계획

■ 경제관리: 계획경제 및 국가 통제/관리 강화

- “국가경제는 자립경제이고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고 명시하면서, 내각 및 국영산업의 역할을 강조
 - 경제사업에 대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 및 일원화통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영산업의 확대를 통한 “상업봉사활동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을 명시
- 참고로 7차 당대회에서는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강조
 -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 발전시켜나아가야 함 ...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

■ 병진노선의 강화;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

-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추진
- 특히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
 - 그외 추진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켓개발사업 추진,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등의 정찰수단들 개발 등

2. 분야별 쟁점

가. 지난 5개년 실적

■ 전반적 평가

- “모든 부문에서 엄청 미달”이란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왜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인가?
 - 8차 당 대회의 평가는 제7차 당 대회의 목표가 기준이 된 것으로 판단
 - 7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중점 목표뿐 아니라 부문별 목표들이 ‘세계선진 수준’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기되었음.¹ 이는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²
 - 이러한 목표와 비교할 때, 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모든 부문에서 엄청 미달”이라는 실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판단됨

나. 향후 5개년 계획

■ 자력갱생의 산업정책: 금속 및 화학공업 우선 투자를 통한 생산 정상화와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소비품 증산

-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과거의 자력갱생과 무엇이 다른가?
 - 첫째, 김정은 시대 들어 대외경제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 개방을 모색하고 있음
 - 경제개발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에 무역권 및 합영합작법을 부여하고, 폭넓은 대외경제활동을 강조(사회주의 헌법 참조³)

1. (전력) 대규모의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동시에 추진, (기계)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 (농업) 농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하며,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율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 것, (경공업)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 (과학기술) 중요한 경제기술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등.

2. 김정은 위원장이 단기간에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자신감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김정은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그러나 대북제재의 본격화로 철강, 기계, 화학제품 등 중간재 수입이 차단되면서, 강도높은 자력갱생, 즉 ‘자급자족’이 제시된 것임

○ 향후 5개년 계획에서 자력갱생의 실질적 목표는 무엇인가?

- 대북제재가 본격화·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자력갱생의 실질적 목표는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에 있음
- 이는 8차 당대회에서 “인민들의 식의주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데서도 입증

○ 왜 금속 및 화학공업 우선 투자인가?

- 이는 장기 대북제재 하에서 중간재의 국산화가 자력갱생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반영
-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철강, 화학제품 등 중간재 수입이 중단됨
- 한편 7차 당대회에서 강조했던, 에너지와 식량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에너지 문제는 수력, 화력 및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완화하고, 식량문제도 최근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계획량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 금속 및 화학공업의 국산화의 관건은 무엇인가? 성공 가능성은?

- [금속] 주체철 생산: 전극, 합금철, 내화물 생산기지 확충(부유예열식 산소열법용광로와 고품위망간정관생산기술) ==> 고품위 합금강 생산
- [화학] 탄소하나화학공업: 갈탄을 이용하는 석탄건류공정, 촉매의 국산화,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 완비 ==> 비료와 비닐론, 기초화학제품 생산 정상화

3. 북한에서 ‘핵동력공업’이란 용어는 2004년 NPT에서 원자력발전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용했고 2012년 “우주 및 핵에너지개발과 핵억제력보유는 조선의 당당한 권리”(노동신문, 2012.5.17.), 그리고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왕창욱이 원자력공업과 핵동력공업을 혼용해서 사용한 바 있음. 단 핵동력공업의 ‘창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판단됨

- 이들 가운데 부유에열식산소열법용광로, 탄소하나화학공업의 공정 등은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높은 수준의 ‘선진기술’이 요구되는 부문으로서, 수년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간 이들 부문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이들 ‘선진기술’의 성공 여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음
- 그렇다면 향후 5개년계획에서 단기적으로 주력할 산업정책은 무엇인가?
-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살림집 건설 확대, 공원/유원지 조성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안정화에 주력
 - 중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획기적 증산을 기대할 수 없음
 - “800만t의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검덕지구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 등 유독 건설부문에서 목표 수치들이 등장하고 있음

■ 병진노선과 핵동력공업

- 왜 이 시점에 핵동력공업의 창설 계획을 언급한 것인가?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했던 반면⁴, 이번에는 “핵동력공업의 창설에 본격 진입하기 위한 계획”을 언급

4. Baldwin, R(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pp. 80~81. 한편 Kai-Fu Lee는 두 가지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이 독보적 기술 선도국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 ①발전의 시대에서 구현의 시대로 전환, ②전문가의 시대에서 Data의 시대로 전환

- 핵잠수함의 동력이 핵발전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한 전력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군사문제 해결과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전력문제 해결뿐 아니라 핵잠수함 건조를 시사함으로써 대미 압박용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

■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

- 현재 북한에서 과학기술은 “정면돌파전의 열쇠”라고 정의될 만큼, 자력갱생과 병진노선 성공의 관건이 되는 부문임
-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인들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가?
 -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성장 방식은 지식/기술의 축적을 강조하고 있는 ‘내생적 성장이론’(Lucas, Romer 등)으로 볼 수 있음. 그 근거는 기술의 특성과 북한의 관련 정책임
 - 지식/기술의 수확체증,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의 특성
 -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명, 과학기술중시, 과학자 우대, 전민 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지식경제, 수자경제 등
 -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고강도의 기술 역량이 축적되어야 하고 개인과 조직 간 목표의 정합성이 전제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구축, 자원조달 및 R&D 투자 등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함
- ICT가 경제성장에 주는 의미는?
 - 정보 획득 및 확산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ICT기술은 채택능력(adoption capacity)이 있는 후진국들에게 희망을 제공
 - ICT와 새로운 글로벌화(New Globalization): G7국가가 지식을 독과점함으로써 국가 간 소득격차가 오히려 커지는 디버전스 효과가 나타

났던 과거의 글로벌화와 달리, ICT 시대의 특징인 오픈 소스, 개방적 혁신 등으로 ICT가 지식의 확산, 습득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단순 교역의 이익을 넘어서는 성장 효과를 일으키는 새로운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국 등 일부 개도국의 부상, G7국가와의 격차 축소, 수렴현상을 야기했다고 주장 (Baldwin, 2016⁵)

-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교육 및 SW 개발 수준을 비교할 때, 채택능력(adoption capacity)이 높은 편임

○ 대북제재가 ICT 역량 축적에 미치는 영향은?

- 대북제재는 기술이전을 차단하기 때문에, 채택능력의 향상 및 고강도의 기술 역량 축적을 크게 제약
- 기술혁신은 매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므로, 후진국들은 대부분 기술혁신보다 기술이전에 의존하게 됨. 기술이전은 주로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 무역(중간재에 체화된 기술) 및 모방(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 북한의 경우, 대북제재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히 중간재 수입의 중단이 아니라 그에 체화된 기술의 이전을 차단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결국 대북제재 하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기술혁신과 모방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려할 때, 여기에도 고강도의 기술 역량 축적이 전제되어야 가능. 이것의 성공여부는 금속 및 화학공업의 국산화에도 영향

○ 그렇다면 8차 당대회의 결정은 ICT 역량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8차 당대회에서는 기업의 자율성보다는 정부 통제/관리를 강화하면서 일꾼들의 역량과 태도를 강조

5. Baldwin, R(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pp. 80~81. 한편 Kai-Fu Lee는 두 가지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이 독보적 기술 선도국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 ①발전의 시대에서 구현의 시대로 전환, ②전문가의 시대에서 Data의 시대로 전환

- 일군/간부들의 “그릇된 사상관점, 무책임, 무능력 및 구태의연한 사업방식 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경제를 추켜세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혁신, 창조 및 진보를 다그치고 있음⁶
- 그러나 재원조달, R&D 투자 및 지식/기술 축적 등의 제반 여건이 충분히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군/간부들의 역량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것으로는 개인과 조직 간 목표의 정합성을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음
-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써 왔고, 8차 당대회에서는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8.29) 제32조)
- 따라서 향후 개인과 조직 간 목표의 정합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지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 가운데 핵심 관전 포인트라 판단됨

3. 남북관계의 과제

■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자체 수요에 기반한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이전 시대와 달리 대외경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데 있음
- 8차 당대회에서도 자력갱생 강조와 함께 대외경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을 발표

5. 이는 대북제재 하에서 의존할 것은 인적 자원뿐인 상태임을 반영. 즉 대북제재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일군/간부들의 역량과 태도를 강조하게 되는 하나의 주된 요인임

- 관광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후 본격 추진 되는 이유는 이후 본격화된 제재의 돌파구로서 새롭게 고려하게 된 데 따른 것임
-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은 북한 내부의 수요를 반영하는 기조로 서술되어 있으나,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및 자력갱생의 명분 등을 고려할 때, 명시할 수 없는 대외협력의 기대가 깔려 있다고 판단됨

■ 북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향후 남북경협은 북한의 needs와 pain point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보다 큰 틀에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한국, 중국 등은 내생적 성장이론을 구현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그간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 자원조달 및 R&D 투자 등에 대한 지식, 기술 및 노하우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음
 - 8차 당대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경협의 실마리가 금강산 관광 협력이라면, 또 다른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남북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 할 수 있음
 - 금강산 관광 협력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반면, 남북한 인적 교류에 의한 KSP는 한국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장될 여지도 있음

북한 제8차 당 대회(경제) 분석 토론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1. 주요 내용

- 노동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성과, 5개년전략 목표 미달성 요인 분석, 향후 5년간 전략과 목표, 5개년계획 기간 수립, 5개년계획 기간 경제 부문별 발전 방향과 과제 등

구분	비고	
	성과	개괄적으로 언급
7기	5개년전략 미달성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기간 예견했던 목표 미진 ○ 대외적인 원인(객관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 매년 발생한 자연재해 - 2019년 발생한 코로나 상황 장기화 ○ 대내적인 원인(주관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립에서 과학적 타산 부족 - 경제과학기술의 부진 - 불합리한 경제사업체제와 질서 - 일꾼들의 사상관점, 무책임한 사업 태도, 무능력, 구태 의연한 사업방식 등 <p>*과거 당대회와는 큰 차이</p>

구분	비고		
8기	전략과 방향	경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업체계 복구 정비 - 경제 부문 간 유기적 연계 복구 정비 ○ 보강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 토대
		총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 특히 경공업 부문에 대한 원부자재 해결 - 농업부문 비료, 농기계 등 물질기술적 문제 해결
	현실적인 5개년계획 수립	목표	○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가시적인 생활 향상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수행 등 ○ 경제관리개선 ○ 과학기술에 의한 생산성 강화, 개선 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 대외경제활동에 의한 자립경제 토대 보강
		고려 및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가능성 고려 ○ 요구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자립적 구조완비 - 수입의존도 감소 - 주민생활 안정
	5년간 경제 부문별 발전방향과 과제	정비보강 필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산업(금속, 화학, 전력, 석탄, 채취, 임업) ○ 교통운수, 건설, 건재, 체신,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
		식의 생활 개선 필요산업	○ 농업, 경공업, 수산
		시, 군 지방 발전	○ 농촌건설, 지역경제
		경제관리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체계 일원화 ○ 공장, 기업소 경영활동 여건 개선 ○ 생산력 재배치 필요부문 보강 ○ 재정, 금융, 가격 등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

2. 분석 및 평가

- 금번 당대회의 경제 부문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 첫째는 특별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며
 - 둘째는 향후 5년간의 경제전략을 실사구시에 기반하여 제시한 것이며,
 - 셋째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부상하는 부문과 가장 말단 행정단위인 시, 군의 자립 즉 자율성 부여를 통한 성과 달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요약
-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부터 시종일관 견지해온 경제기조이며, 시기별로 강조 수위의 차이가 존재할 뿐

1) 경제 전반에 대한 특별한 비전 미 언급

- 7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한 부분인 경제강국건설 비전 명시
 -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 식량의 자급자족, 국내생산에 의한 종합적인 경제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자립경제강국과 지식경제강국 건설 제시
 - 특히, 1980년도에 열린 6차 당대회에서는 알곡 1,500만톤 등 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10대전망목표 제시
- 이처럼 지난기간 당대회는 희망적인 비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었으나, 8차 당대회는 실사구시를 선택함으로써 주민들의 실망을 불러올 수 있는 여건 충분
- 그럼에도 북한이 과거와 다른 형식을 선택한 것은 당대회 정례화, 주기적인 경제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정상적인 국가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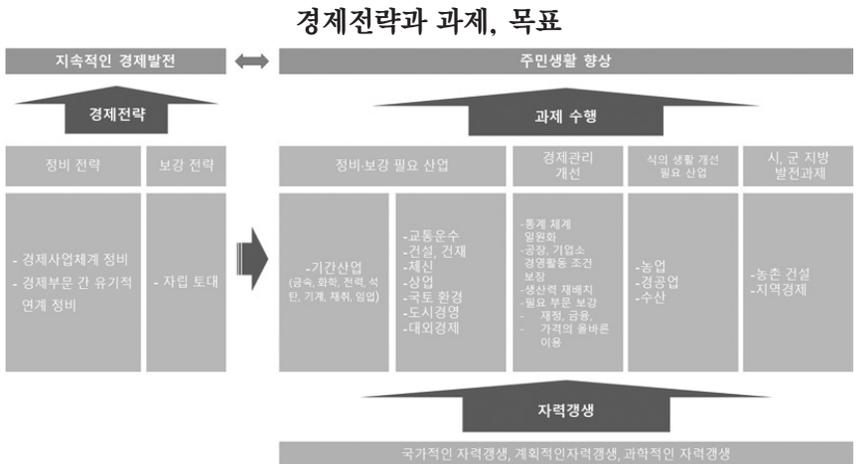
- 금번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 목표인 경제강국을 위한 두 번째 5년 과제*

* 과거 경제발전계획은 3년, 5년, 6년, 7년을 기간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등 여러 회의를 통해 수립된 것으로 6차당대회의 경우 2차 7개년계획기간으로 80년대 10대전망 목표가 발표되기도 함

- 당규약 개정을 통해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 했는데, 이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제도 5년 단위로 새롭게 수립될 것임을 예고

2) 실사구시에 기반한 경제전략 제시

○ 당대회에서 제시된 향후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전략은 정비, 보강전략이며, 여기서 정비보강은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 넣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이해



■ 정비보강을 경제전략으로 제시한 배경

○ 2017년 핵무기 완성을 통한 전쟁억제력 확보, 2018년 경제총집중노선 선택, 지속되는 대북제재 등 대내외적 조건에서 대내경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토대구축을 위한 산업시설 정비보강 매우 중요하게 제기

- 북한의 전반 산업시설은 대부분 정권수립 초기 구축된 것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었으며 특히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일부 기업들은 가동이 어려운 상황

- 이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일부 산업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 상당하며 이에 실질적인 생산능력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시장화가 확산되고 고착되는 현 상황에서 최대의 경제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경제관리방법 도입 필요성 제기

- 국가경제관리방법인 대안의사업체계(공업관리)와 농업지도체계(농업관리)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가경제관리방법(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장책임관리제)으로 전환 과정에 있음

- 8차 당대회에서 ‘시범적으로 연구도입되고 있는 경제관리 방법’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최적의 경제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정리정돈 필요

○ 또한, 시장과 계획의 공존으로 국가경제가 분산되어 전반적으로 비효율

- 군수경제를 비롯해 부문별 경제가 내각과 분리되어 작동하고 있고, 지방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국가 전체의 연계가 끊어지는 등 효율 저하

■ 향후 추진될 정비보강 전략 방향

- 불필요하고 회생 불가능한 공장·기업의 폐업, 개보수를 통한 회생, 보강을 통한 기업 또는 산업의 신설 등을 통해 경제 전반 재구축
 - 경제난 이후 북한은 자금부족으로 중앙중심의 신규 산업 보강에 중점
 - 2020년 신설된 순천인비료공장 신설, 탄소하나화학공장 건설은 화학 공업 부문 보강 사례
 - 원료, 동력, 수송조건이 좋은 지역에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을 5개년 계획의 건재공업부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보강전략의 일환
 - 지방경제의 정비보강이 동시에 추진되어 지방 특색의 산업 조성

- 또한, 경제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체의 경영활동 여건을 보장하여 생산 효율성을 최대로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 등 확보
 - 김정은은 당대회 보고에서 5개년 전략의 미달성 원인으로 불합리한 경제관리사업체계 언급
 - 또한, 2019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개선을 위해 사회주의 상업의 복원, 각종 경제적 제약요인 해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현실적 운용 등을 강조한 바 있음
 - 8차 당대회에서 식의주 관련 과제보다 우선하여 경제관리개선과제 제시, 이는 5개년계획기간 경제관리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의미
 - 공장, 기업소가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업소재정, 자금조달, 가격제정 등에서 다양한 변화 예상

3) 신규 경제부문, 시, 군 자율성 부여 통한 성과 달성

○ 새롭게 등장한 경제부문은 체신, 도시경영, 교통운수, 상업, 채취공업

- 체신은 편지, 우편, 송금, 저금, 유선전화, TV방송 등의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쳤으나, 최근 모바일을 통한 전자결제, 쇼핑 등 이동통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체신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보고는 체신부문에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노동신문)

- 도시경영부문에서 최근 오물처리공장을 신설하고 재자원화를 통한 생산활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한편 도시 미화, 상하수도 개선 등 도시경영 관련 사업이 중요하게 제기
- 시장화에 의한 화물유통량, 주민이동의 증가 등 북한의 교통 변화 반영
- 최근 상업유통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고 있지만, 하층민에 대한 상업의 역할 부재, 이에 대한 당국의 조절통제력 필요

○ 시, 군의 자립발전 강조는 일부 ‘자율성’ 부여로 해석 가능

- 7차 당대회에서는 “지방스스로 살림살이를 위한 작전을 세우고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 했으나, 8차 당대회에 서는 시, 군의 자립적 및 다각적 발전 강조
- 이는 중앙에 의한 경제계획 수립·시행 능력 저하에 따른 당국의 새로운 자력갱생 방식

당대회에서 발표된 경제 부문

	7차당대회	8차당대회	비고
1	에너지(전력)	금속	
2	석탄	화학	
3	금속	전력	
4	철도운수	석탄	
5	기계	기계	
6	화학	채취공업(광물)	신규(석탄과 분리)
7	건설	교통운수	
8	건재	기본건설 및 건재	
9	농업	체신	신규
10	수산	상업	신규
11	경공업	국토환경	국토관리, 환경보호 통합
12	지방경제	도시경영	신규
13	국토관리	대외경제	
14	환경보호	농업	
15	대외경제	경공업	
16		수산업	
17		시, 군(지방경제)	

결론: 한마디로 향후 5년은 국가전반 재정비(정비보강)를 통한 경제운영의 정상화(주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구축)

북한 제8차 당 대회(경제) 분석 토론

한홍열 (한양대 교수)

1. 북한경제는 얼마나 특수한가?

경제발전 전략은 중장기적 방향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 수단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8차 당 대회 결과 등 북한 관련 최근 정보가 갖는 일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의 평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관점, 특히 경제발전 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낮은 소득수준, 낙후된 산업화 및 기형적 구조, 낮은 무역의존도와 폐쇄성, 후진적 무역구조와 높은 대외불균형 등 북한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대체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핵 관련 제재라는 극심하게 불리한 대외환경에 직접적으로 비롯되고 있지만, 북한이 오랜 기간의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성이 근년들어 매우 강화·지속되고 있는 정도로 볼 수도 있다.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제반 ‘비경제적 환경’은 세계의 수많은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 경제와 양태를 달리할 뿐이며 북한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년 나이지리아가 전통적 산업인 농업을 배척하고 석유수출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극심한 실업문제와 성장부진을 겪고 있다. 이는 부패를 포함한 거버넌스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의 장기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섬유시장의 개방은 중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저개발국들이 산업화하지 못하고 Squeeze Out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를 위한 초기 모멘텀을 잃어 버리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이 비슷하거나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산업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여타 개발도상국과 같이 북한경제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특수성에 대한 천착은 산업화를 위한 경제발전 전략의 일반성을 도외시키고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현미경적 관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일반적 타당성과 그 제약요인을 ‘일반적 관점’에서 평가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의 특수한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통하여 북한경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점은 잘해야 순환논법에 지나지 않는다.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가 오랫동안 정책실패를 수원국의 Governance에 책임을 묻는 경향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질서 그 자체에 모든 원죄를 묻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보다는 세계적 불평등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외적’ 요인으로 ‘경제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그 자체를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경제학자나 정책전문가들이 북한경제에 대하여 제재와 같은 ‘비경제적 수단’에 기대어 특정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이 수십년에 걸쳐 증명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비경제적 제약요인’하에서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 정책전문가들이 제재와 같은 제약요인의 강화유지를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이라 볼 수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2. 북한의 산업화, 남북경제협력과 Policy Alignment 문제

북한경제에 대한 관심의 주요한 목적은 결국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발전전략과 Alignment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국제개발원조의 원칙에서도 효과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산업화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자본축적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산업화를 위한 산업 정책은 산업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산업정책은 일종의 ‘필요조건’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산업화의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대체로 보통의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하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매우 전형적인 ‘Easy Phase of Import Substitution’의 Policy Regime 하에 있는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특히 산업화의 과정에서 수입대체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산업화 정책은 일관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향상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제품의 충분한 생산 및 품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속 및 화학공업의 강조도 제조업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재의 공급 및 국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매우 전형적인 초기 단계의 수입대체정책인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의 경제분야 전략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 프레임워크의 지속으로 요약된다. 즉,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으로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제재 완화가 조기에 실현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2016년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고 원자재와 설비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의 산업부문별 목표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기간공업 (금속, 화학), 전력생산, 석탄 및 채취공업, 기계공업, 임업, 철도운수부문의 강조
-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업과 경공업, 상업 부문의 발전에 대한 강조
- 농업 부문의 식량 자급자족 실현, 경공업부문 생산 확대 및 질 제고

수입대체와 함께 북한은 이른바 균형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략의 성공 여부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이른바 ‘Big Push’에 필요한 자원의 유무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이윤을 초기에 실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요창출을 통하여 다른 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이 산업의 미래 이윤창출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연구로 뒷받침 된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할 때,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이와 같은 북한의 산업화 전략과 Align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장이 충분한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제공할 경우 동시적 균형적 산업화가 보다 더 용이하거나 바람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산업전반의 생산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경협도 이와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제재의 문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기대’의 영역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비경제적 제약요인’하에서 낮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머문 채 유지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여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붕괴’와 같은 현상을 예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북한의 경우 근년에 있어서의 장마당 확대, 생산활동의 자율성 개선 등에 의한 ‘Allocative Efficiency’가 제재로 인한 제약을 상당폭 상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역시 세계시장과의 분업관계 형성을 통한 자본축적의 계기를 ‘일정한 기간’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강조되었던 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생산 책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통일적 지도, 계획경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협동농장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혁적 요소가 후퇴되었을 가능성을 짐치게 한다. 이러한 점들은 ‘일정한 기간’에 대한 유추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경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북한 제8차 당 대회(경제) 분석 토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당대회 및 경제개발5개년계획 개관

■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전제

- 8차 당 대회 총화보고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대외관계의 전개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
- 남북관계나 대미관계의 개선을 개선을 바라지만, 이러한 개선은 북한의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나 남한의 군사적 위협의 해소 등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상정

■ 기본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

- 당 대회 총화보고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특정 방향으로의 상황 전개를 전제하지 않은 채, 북한이 취할 최소한의 방향성만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부문간 협의회를 거쳐서 발표된 결론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유사
- 현재의 대외관계가 개선되거나 혹은 현재의 악화된 대외관계와 그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정책기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그에 따라 매우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상황변화에 대응한 정책기조의 전환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자체

- 자력갱생을 기본 정책기조로 하면서도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경로를 포기하거나 차단하지는 않고 있음.
- 대북 경제제재 등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수입의존도 축소 등의 정책을 추구하지만, 대외경제 관계의 축소를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 대외 경제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목적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기조임.
- 대북 경제제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과제를 제시

2. 경제개발5개년계획 평가

가. 개관

■ 경제발전 5개년전략 평가

- 목표 달성 실패 인정,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
- 금속과 화학공업의 주체화, 자립화 실현을 위한 돌파구 마련, 전력, 석탄, 기계, 정보통신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준비와 토대마련에 성과

■ 성장보다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산업 구조 구축 추구

- 경제전략을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지칭하며,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

- 경제가 외부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목표
- 발전, 성장, 현대화가 아닌 정비 및 보강을 강조한 것은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조건에서는 의미 있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타격을 입은 부문을 정비 및 보강함으로써 대외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계획의 기본 목표

나. 산업별 주요 내용

■ 소재부문의 공급역량 강화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금속과 화학소재는 대북경제제재 및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임.
- 북한은 대외경제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금속 및 화학소재의 공급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며, 경제의 자립을 위해서는 금속 및 화학소재의 공급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금속: 주철 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재 생산을 확대
 - 주요 제철, 제강소의 생산 공정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제철로 건설, 북부지구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적 문제 해결하는 것 등을 과제로 제시
- 화학: 기술역량 강화, 화학공업 구조 개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 증대
 - 첨단기술을 통하여 주체적인 화학공업 창설, 자체 원료에 의존하는 화학공업으로 전환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됨.

- 금속의 경우,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의 기술적 문제 해결과 2020년에 제기된 부유예열식산소열법용광로의 건설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화학공업도 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 제시된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과 관련된 기술 문제 해결 및 투자사업이 주된 과제가 될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당 대회에서는 5개년계획이 전반적으로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경제제재에 따른 소재 및 설비의 수입 어려움 등으로 향후에도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음.

○ 당대회 결론에서 자원을 이곳저곳에 분산하지 말고 철강재 생산과 화학제품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는데 집중할 것을 제시한 만큼, 제조업 부문에서는 금속과 화학소재 부문에 중앙정부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추정됨.

■ 소재부문에 중앙정부의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국내 경기 활성화는 건설, 관광,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건설과 건설자재 부문이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된 유일한 분야

○ 평양에 연간 1만호, 5년간 5만호의 주택, 검덕지구에 2만5천호의 주택 건설, 시멘트 생산 목표 800만톤 제시

○ 건설은 대북경제제재 하에서 북한이 자체 자원을 동원하여 추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분야임.

○ 특히 평양에 5만세대의 주택건설을 제기한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돈주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임.

-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핵심 소재인 시멘트의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이외의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김정일 시대부터, 특히 김정원 위원장 시기에 확산된 방식

- 건설, 특히 대규모 주택건설은 즉각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 평양지하철의 현대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평양시의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과 연관

■ 금강산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부문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분야

○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된 이후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기 이전까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기여

○ 코로나19 상황만 개선되면,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광자원의 확충을 도모

■ 지방경제 활성화를 중앙정부 재정 투입이 없는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평가

○ 지방의 자립적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오래전부터 추진된 정책기조였으며, 대북 경제제재 강화 이후 더욱 강조된 정책기조

○ 5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시군에 매년 1만톤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각 지역이 특색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혜조치도 부여할 것을 요구

■ 농업부문은 국가수매 규모의 확정 부문이 눈에 띈다.

- 당대회 결론에서 앞으로 2~3년간 매년 국가의무수매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하며,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식량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북한이 2019년 식량 생산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한 만큼 2019년 수준을 2~3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농업부문에 엄격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반면, 이 수준으로 적어도 2~3년간 고정한다는 것은 생산증대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소지도 있음. 이 부분은 향후 지켜봐야 할 것임.

■ 여타 분야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정책기조나 2019년 전원회의 결정문 등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석탄, 발전, 건설, 수송 부문 등에서 5개년전략 기간 중의 정책과는 다소 다른 과제 제시

- 발전: 조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부문 강조
 - “조수력발전소 건설에 국가적힘을 집중하며 핵동력 공업 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
 - 제로에너지, 탄소제로 건물 건설 등
- 석탄: 유연탄 공업 발전, 석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 수송: 평양 지하철도의 기술개건과 평양 지하철도역 현대화, 대형 무역선의 건조 등
- 경제발전5개년전략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키워드로 등장하였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강조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임.
- 2019년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국영상점망의 복구

다. 경제관리체계

■ 내각의 역할을 강조한 2019년 전원회의 결정문의 기초가 지속

■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시장화나 김정은 위원장 시기의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음.

○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평가할 근거는 아직 없음.

- 이를 개혁은 결국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총화보고 등에서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은 없음.

■ 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강조는 집권화나 분권화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질서의 회복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시장화는 국가에 의한 경제의 통제 역량 약화와 함께 진행되었음.

- 특히 당이나 군 등 특권기관이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시장화를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분절화가 심화되었음.

- 국가경제계획인 내각의 경제부처에 의한 통제나 관리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특히 중앙정부에 의한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이를 토대로 하는 경제정책의 추진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음.

○ 즉, 현재 국면에서 국가에 의한 통일적 지도의 강화는 분권화에 역행하는 측면보다는 경제운영의 정상화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은은 집권 이후 경제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음.

- 집권 이후 경제관리제도의 개편 작업을 시작하면서 제기한 목표의 하나가 ‘각종 특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적 통제 행위를 벗어나는 경제활동의 제거’를 제시
- 이는 2019년 전원회의 결정문의 ‘과도기적인 임시방편’으로부터의 탈피 요구로 이어졌으며 당대회 결정문에서도 “당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남.
- 경제제재 국면에서 무역을 포함한 국가의 경제통제 역량 약화를 확인하였을 수도 있음.

■ 관련하여 본래적인 의미의 경제계획을 복원할 것을 요구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앞으로 조성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예견성 있게 판단하면서 단계별, 년차별 계획부터 잘 세워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일단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 집행을 위한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를 실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며, 국가적으로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지표별로 엄격히 장악 추진, 총화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 국가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의 강화를 과제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권부문의 경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특권부문의 경제행위가 경제계획 등 국가의 관리 하에서 하도록 하는 것

- 현재는 이러한 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 특권부문 경제행위의 위축의 기회비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

라. 평가

- 당 대회 및 경제개발 5개년전략 발표의 근본적인 의미는 국가운영 및 경제운영의 정상화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임. 특히 5개년 계획을 통한 국가 운영 방식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으로 평가됨.
 -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운영 방식 변화에 따라 계획화 시스템을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의 중앙집중적 일원화·세부화 체계로의 회귀는 불가능함. 따라서 국가, 특히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경제운영의 정상화를 추구
 - 완충기적인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상정한 가운데, 최소한의 과제만을 제시
- 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면, 5개년계획은 경제제재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적극적인 발전 전략이라기보다는 악화된 대외환경 하에서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응 전략의 성격이 강함.
- 대외환경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대북경제제재 하에서 북한경제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재공급을 담당할 금속 및 화학공업 우선 투자
- 시멘트 등 내부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건설부문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추정
- 그런데,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5개년계획도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임.
 - 금속 및 화학 소재 공급 역량 확충은 대외경제 관계가 좋을 때에도 지

속했으나 성과를 거두기 못하였음.¹

-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건설 붐을 통한 경기활성화는 대북 경제 제재로 신규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임.

○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내각의 경제관리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관리개선 방향은 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것이 경제개혁의 후퇴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임.

1. 다만, 제철부문은 용융환원공법의 일종인 것으로 보이는 산소열법용광로는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음. 과거에는 주체철이 세계적인 기술진보로부터 벗어난 과거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이후 북한의 주체철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방향과 일치하게 되었음. 즉, 세계 제철 기술은 고로방식에서 용융환원공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산소열법용광로는 용융환원공법의 일환이고, 북한이 2020년에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에 건설하겠다고 한 부유예열식산소열법용광로는 이를 개선한 파이렉스 공법과 유사한 기술로 보임. 그리고 용융환원공법이 아직 단위 설비의 규모가 고로공법에 비해 작지만 코크스화 공정과 소결공정이 필요 없어서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음.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는 2년 정도의 기간에 건설 및 가동되었음. 이 정도 속도라면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에 각각 새로운 부유예열식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한다면, 기술적 문제가 있더라도 선철 공급역량을 일정하게 높일 가능성도 있음.

북한 제8차 당 대회(경제) 분석 토론

이찬우 (일본 테이코대 교수)

- 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총결하고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정하였음.
 - “경제발전 계획”(2021-25년)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당 대회 개최사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평가하여 실패를 자인했음.
 - 2020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힌 바 있음.
 - 객관적요인: ①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의 후과, ②자연재해, ③보건위기 장기화
 - 주관적요인: ①<5개년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똑똑히 세워지지못함, ②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함, ③불합리한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 ④만연된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인 사업태도, 무능력, 구태의연한 사업방식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의 목표(2020년 목표)는 아래와 같았음.
 - ① 경제성장 목표: 년 8%로 2020년에 2014년의 1.6배로 성장
 - ② 에너지: 수력 250만kW, 화력 150만kW, 자연에너지 30만kW

- ③ 식 량: 800만톤 생산, 장기적으로 900-1000만톤
- ④ 화학공업: 질소비료 120만톤 생산(남흥청년화학 60, 흥남비료 60),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메탄올 30만톤, 합성석유 15만톤, pp섬유 1만톤, 에틸렌 5천톤 생산)
- ⑤ 운 수: 원산항 5백만톤 처리 규모로 건설
무역항 3700만톤 통과능력
- ⑥ 무 역: 다각화, 다양화 (러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 ⑦ 각 부문별 산업생산 실태와 2020년 생산목표는 아래와 같음.

구 분	1980-1990년 평균생산실적	2003-2013년 평균생산실적	2014년말 시점의 재조사·생산능력평가				2020년 생산목표	
			설계능력 (A)	현존능력 (B)	비율 (A/B)	생산실적 (C)		비율 (B/C)
전력(용량)	334만kW	244만kW	740만kW	518만kW	70%	228만kW	44%	500만kW
석 탄	3,941만톤	1,387만톤	3,090만톤	1,793만톤	58%	1,650만톤	92%	3,800만톤
철 강	265만톤	14만톤	377만톤	117만톤	31%	12만톤	10%	120만톤
시멘트	538만톤	245만톤	566만톤	266만톤	47%			500만톤
질소비료								120만톤 (흥남비료 60, 남흥청년 60)
탄소하나화학								석탄가스화 30만톤 메타놀 15만톤합성석유
철도화물수송량								5,500만톤
항만처리능력								원산항 500만톤 무역항 총3,700만톤
곡 물	657.6만톤(1979) 404kg/1인					614만톤 301kg/1인		800만톤
고 기								25만톤
수산물								150만톤
직 물								2억5000만m
신 발								6000만켤레

○ 경제정책의 성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한 것이라고 평가함 -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자평

- 농업부문: 가뭄과 홍수, 공급부족에도 과학농사, 다수확 성과
- 금속공업, 화학공업: 주체화, 자립화 실현 돌파구

-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부문 추켜세우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시키는 기술준비와 토대축성에 성과
- 경공업: 공장개건, 소비품 질과 생산량 높이는 잠재력 확보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10-2025년)의 방향

구분	내용
기본종자, 주제	자력갱생, 자급자족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요구조건	현실적 가능성 고려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 완비 수입의존도 축소 인민생활 안정
경제전략	정비전략, 보강전략 (유기적 연계 복구정비, 자립적 토대정비) : 고성장추구보다는 정비와 보강이라는 과도기 전략
총적 방향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집중
중심과업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관건적 고리로 투자집중 농업부문의 물질기술토대 강화 경공업부문의 원자재보장으로 인민소비품생산 증가 : 1953년이래의 “중공업우선, 농업 경공업 동시발전” 정책 답습 과학기술발전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
목표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 개선
과제	내각책임제 강화, 국가경제 전일성 강화 경제관리 결정적 개선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와 자재 국산화 자립경제 보완, 보강으로서 대외경제활동
부문별 목표	철도현대화 핵동력공업(원자력발전소) 창설 산업건설과 인민 주택건설 동시추진 관광산업 활성화 지방의 자립화 강화

○ 각 부문별 계획: 5개년 전략과 비교 1

구분	5개년 전략(2016-2020)	5개년계획(2010-2025)
금속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 ·연료, 원료, 자재 국산화 ·2차, 3차 금속가공제품 생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철 생산체계 기술적 완성과 생산능력확장 ·철강재생산 제고 (에너지절약형 제철로 신규건설, 갈탄을 선철생산에 이용)
화학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비료 생산체계 확립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기술로 주체적인 화학공업 창설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
전력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력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복구 ·송배전망 개진 ·전력계통 유연교류송전계통 전환 ·풍력발전, 조수력, 생물질에너지, 태양광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면한 전력증산, 정비보강 ·중장기전략으로 조수력발전에 집중 ·핵동력공업창설에 진입
석탄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사 선행 ·채탄설비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 자재, 자금, 노동력 집중 보장 ·탐사와 굴진으로 채탄장 확보 ·유연탄공업발전
기계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진현대화, 정보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창조형 공업으로 방향전환
교통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현대화 ·신규 선박 건조 ·원산항을 세계적 항으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현대화 ·평양지하철도 기술개진 현대화 ·대형화물선 건조 ·자동차통합운수관리체계 구축
건설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인 기념비적건축물 건설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있는 설계 ·녹색건축, 영에너지, 영탄소건축 기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 등 기본건설 진행(평양시 5만세대건설, 검덕지구 2.5만세대 건설), ·산업건설과 인민수요건설 동시진행

○ 각 부문별 계획: 5개년 전략과 비교 2

구분	5개년 전략(2016-2020)	5개년계획(2010-2025)
건재공업	·시멘트생산 현대화 ·마감건재 다양화, 다중화, 다색화	·800만톤 시멘트생산 ·마감건재 자급자족 (탄소제로, 에너지제로건물에 맞는 건재생산준비)
상업부문		·국영상업 발전 ·급양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성 격 회복(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 회복)
대외경제	·대외무역 활성화 (중국의존도 저하, 러시아 동남아 등과 무역확대) ·수출장려, 가공품위주 수출 합영 합작 계고 ·투자유치, 경제개발구 사업	·과학적 전략, 목적지향성
관광사업	원산-금강산지대개발, 무봉국제 관광특구개발, 관광대상지 조성, 녹색관광	·관광사업 활성화 ·소개선전시업, ·금강산지구 개발
경제관리 개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 도와 전략적 관리 실현 ·국가적인 통계체계에 모든 경제부 문과 단위들을 망라시킴 ·계획, 재정, 금융, 가격 등 경제수 단을 활용 ·가변적 기준가격제도 확립 사회 주의기업책임관리를 전면적으 로 실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 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적용	·자립성, 계획성, 인민성 강화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 관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 ·원가저하와 질제고 ·국가통일적 지도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 강화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 개선 ·생산력 합리적 재배치 ·재정, 금융, 가격 등 경제적 공간 이용
농업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먹 는 문제 해결 우량품종 육종, 영농방법 개선 유기농법 장력 농업과학기술성과 도입 경작지 확대	·알곡 고지 점령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 증 산, 새땅찾기, 간석지개간 ·농촌정리 수리화, 기계화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 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경공업	각 소비재생산 확대	·원자재 국산화, 재자원화가 생명선 ·현대화, 선질후량의 원칙
지방공업	·지방이 주민들의 식량, 주택, 연 료, 식수, 기초식품 문제를 해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수출품생산기 지를 조성 운영하여 외화획득	·자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전략과 전망목표를 수립 ·해당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 하여 발전

○ 경제계획 작성의 평가

1) 대회 준비과정의 차별성

-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소조를 각도에 파견하여 간부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 지식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실태파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했다고 밝힘
- 이는 노동당이 인민들에 대해 <탈권위> <소통>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었음
- 또한 공식적인 보고로부터 파악하는 실태를 믿을 수 없어 직접 인민들에게서 실태를 묻고 파악한 것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자기비판>을 한 것임

2) 경제계획 내용의 평가

① 전반적 성격

- 방어적 성격의 과도기 경제계획(정비와 보강)이며 경제제재가 지속되어 대외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에 근거한 버티기 계획임
- “경제와 핵 병진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국가의 통일적 관리 강화 : 상업 부문에 대한 언급

- 7차 당대회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상업부문을 8차당대회에서 언급하여 국영상업을 강화하고 사회급양부문에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회복한다고 하였음
-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통해 국영상업이 주도하는 사회주의상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도가 보임

③ 지방의 위상

- 자원을 국가가 집중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와 지방에서는 자력갱생의 틀에서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허용하는 것이 병행함

- 지방이 알아서 인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라는 7차당대회 시기의 방침에서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전략과 전망목표를 수립”하라는 정도로 표현이 약회됨
- 현실적으로는 지방이 자체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하여 산업을 일으키라는 것과 시멘트를 각 군마다 1만톤씩 공급해주겠다는 국가지원을 제시함

④ 경제관리개선 언급 미약

-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7차당대회 때와 기본적으로 같지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전략의 내용 언급이 빠져있음(밝히지 않았을 수도)
- 당과 국가를 믿고 중앙의 관리를 따르라는 의도가 보임

⑤ 대외경제관계의 축소

- 7차당대회때의 적극적인 성장전략으로서 대외경제확대 언급이 이번에는 없고 개략적인 언급만 있음 - 경제제재하의 상황인식이 기반
- 국경봉쇄를 자력갱생의 호기로 삼자는 이념적 공세마저 등장한 것도 배경

“완전 봉쇄한 현재의 상황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우리의 내부적 힘과 발전 동력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노동신문 2020년 10월 17일)

⑥ 통계체계 일원화가 불분명함

- “5개년전략(2016-2020)” 내용에서 “적지않은 단위들이 국가통계기관 밖에서 광물생산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그 사례로 국가자원개발성이 장악하고 있는 전국 석탄생산단위는 3,500여개,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단위는 3,170여개이지만, 중앙통계국에서는 석탄생산단위 400여개(11%), 금속 및 비금속광물 생산단위 700여개(22%) 정도만 장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5개년 전략”기간중에 일원화통계체계가 확립되어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일원화된 중앙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5개년 계획 기간중에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확립한다는 말인지 불분명함
- 북한 경제가 인민경제부문, 제2(군수)경제부문, 당경제부문 등으로 분할되어있고 국가적인 통계체계가 이를 다 망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가 통계적으로 생산을 전부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일 것임

3) 2020년의 경제상황에서 보는 평가 : 축소, 폐쇄형 경제

- 물자부족, 수요감소(시장기능 축소) 상황임
- 9월이후 물가가 상승. 외화수요 감소로 시장환율을 하락
- 경제개발구(관광개발구) 개발 추진하나 전망은 불투명함
- 평양종합병원 자재조달 등 어려움 봉착, 당대회시기까지 개원 못함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초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 '사과' 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현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 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제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가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길윤형(한겨레신문 기자)

이원덕(국민대 교수)

정혜경(역사학 박사)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5 (2019. 11)

제 목: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발표자: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6 (2020. 6)

제 목: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발표자: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이정철(숭실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7 (2020. 11)

제 목: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발표자: 이왕희(아주대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순미(아주대 교수)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MOU-IFES North Korean Studies Fellowship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및 북한 관련 해외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통일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 선정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6개월에서 1년 간 △ 분야별 정례 세미나, △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및 전현직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특별강좌, △ 북한·통일 관련 유관기관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 연구과제 발표회, △ 현장체험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뿐만 아니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포럼, 아카데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펠로우십 과정

지원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북한·통일학 분야 연구자, 언론인, 정·관계 인사 등
- 박사과정 수료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5년 이상 현장업무 경력자
- 한국어 구사능력 우수자 및 북한·통일분야 관련 주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우대

연구기간

- 6개월 혹은 1년

※ 지원자가 희망한 펠로우십 기간은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1:1 맞춤형 전담/지도 교수제

모집안내

모집기간 2022년도 사업은 2021년 7월경 공고 예정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fes_apply@kyungnam.ac.kr

2021년도 모집 요강 참조

(https://ifes.kyungnam.ac.kr/kor/SPT/SPT_0101V.aspx?code=SPT200731_0002)

문의처 • E-mail, ifes_apply@kyungnam.ac.kr

• TEL, 82-2-3700-0701, 0708

• <http://ifes.kyungnam.ac.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el: 02-3700-0700 / ifes@kyungnam.ac.kr